

창/원/의/회/소/식

열린마당

가을 / 2025
vol. 53

창원특례시의회



<https://council.changwon.go.kr>

주남저수지 일출



열린마당

가을/2025 vol. 53



진해구 대죽도 거북선 경관 조명

섬 전체를 한 척의 거북선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거북선의 머리와 꼬리 모형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섬 전체를 선체로 표현한 예술 작품이며,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조명 연출이 더해졌으며, 머리에서 꼬리까지의 거리 188m, 해수면에서 머리까지의 높이가 40m로 국내 최대 규모의 거북선 조형물 경관 조명이다

CONTENTS

02 인사말

04 의원현황

8 의정활동

08 주요안건 처리현황

14 5분 자유발언

25 시정질문 및 답변

37 건의·결의문

63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69 의원동정

69 의창구 의원포커스

77 의원연구단체 활동

80 사진으로 보는 의회뉴스

90 의원칼럼

96 2025년도 회기 운영계획



창원특례시의회를
만나보세요.

발행인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발행처 창원특례시의회 사무국

제작부서 창원특례시의회 의정담당관 홍보팀

주소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특례시의회

전화 055)225-5331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입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오신 창원특례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그동안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ESG 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 ESG 학회로부터 창원특례시의회 기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ESG 경영을 위한 노력은 지속가능한 창원의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무엇보다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시정을 더욱 꼼꼼히 견제하고 감시하겠습니다.

내년도 창원시 예산은 고정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재원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독려하고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주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창원특례시의 미래 명운이 달린 대형사업들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6년에도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성실히 실천하며,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창원특례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손 태 화

지난 2025년 한 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오신 창원특례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그동안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힘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ESG 경영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 ESG 학회로부터 창원특례시의회 기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ESG 경영을 위한 노력은 지속가능한 창원의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무엇보다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시정을 더욱 꼼꼼히 견제하고 감시하겠습니다.

내년도 창원시 예산은 고정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재원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독려하고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주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창원특례시의 미래 명운이 달린 대형사업들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6년에도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성실히 실천하며,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창원특례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손 태 화



지도로 보는 우리동네 의원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현황(45명)

• 지역구 의원 40명, 비례대표 의원 5명

카) 내서읍



이 우 완



남 재 욱



황 점 복



서 명 일

타) 회원1·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

파)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

아)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김 이 근



이 천 수



손 태 화



문 순 규



박 승 엽

자)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서 영 권



홍 용 채



이 원 주

차)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박 선 애



정 길 상



전 흥 표

비례대표



박 강 우



김 미 나



김 수 혜



오 은 욱



진 형 익



가) 동읍, 대산면, 북면



권 성 현



최 은 하



김 우 진

나) 팔룡동, 의창동



구 점 득



김 혜 란



김 묘 정

다) 봉림동, 명곡동



김 남 수



안 상 우

라) 반송동, 용지동



강 창 석



박 해 정

마) 종양동, 웅남동



김 경 희



이 정 희

바) 상남동, 사파동



한 은 정



김 경 수



성 보 빈

하) 총무동, 여좌동, 태백동



이 해 련



김 상 현

거) 경화동, 병암동, 석동



김 현 일



정 순 욱

사) 가음정동, 성주동



백 승 규



김 영 록

너)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이 중 화



최 정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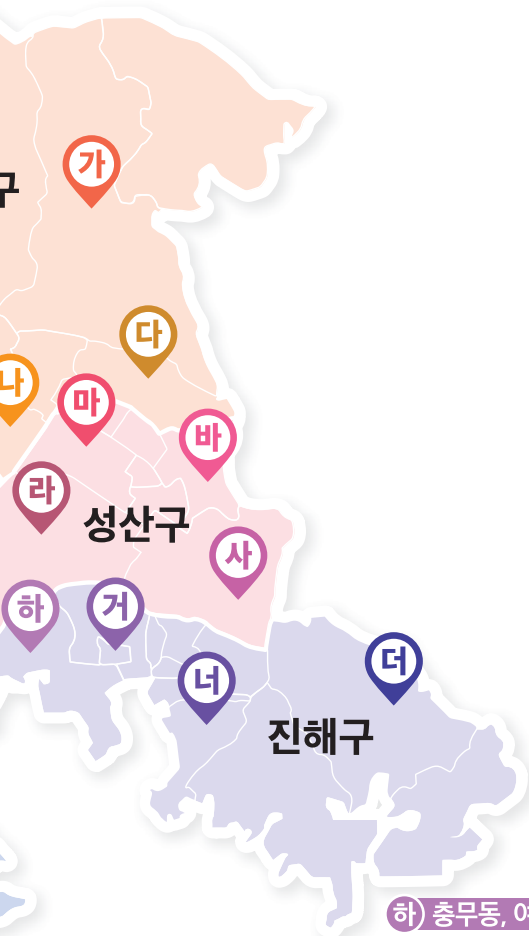
더) 웅천동, 웅동1·2동



심 영 석



한 상 석



의 장 단



의장
손 태 화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



부의장
권 성 현

(동읍, 대산면, 북면)



의회운영위원장
이 해 련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기획행정위원장
박 선 애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산업경제복지위원장
최 정 훈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문화환경도시위원장
정 순 욱

(경화동, 병암동, 석동)



건설해양농림위원장
전 홍 표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의 장

손 태 화 국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

부 의 장

권 성 현 국

동읍, 대산면, 북면

국 국민의힘 더 더불어민주당

| 위 원 회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산업경제복지위원회 | 문화환경도시위원회 | 건설해양농림위원회 |
|-------|--|--|--|--|--|
| 위 원 장 | 이 해 련 국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 박 선 애 국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 최 정 훈 국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 정 순 욱 더 경화동, 병암동, 석동 | 전 홍 표 더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
| 부위원장 | 홍 용 채 국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 김 영 록 국 가음정동, 성주동 | 이 우 완 더 내서읍 | 강 창 석 국 반송동, 용지동 | 서 영 권 국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
| 위 원 | 이 우 완 더 내서읍 | 김 헌 일 국 경화동, 병암동, 석동 | 이 종 화 더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 한 은 정 더 상남동, 사파동 | 백 승 규 더 가음정동, 성주동 |
| | 최 은 하 더 동읍, 대산면, 북면 | 이 해 련 국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 권 성 현 국 동읍, 대산면, 북면 | 정 길 상 국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 심 영 석 더 웅천동, 웅동1·2동 |
| | 남 재 욱 국 내서읍 | 김 이 근 국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 김 경 희 더 중앙동, 웅남동 | 김 경 수 국 상남동, 사파동 | 최 은 하 더 동읍, 대산면, 북면 |
| | 서 영 권 국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 이 천 수 국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 홍 용 채 국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 구 점 득 국 팔룡동, 의창동 | 한 상 석 국 웅천동, 웅동1·2동 |
| | 박 해 정 더 반송동, 용지동 | 문 순 규 더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 | 이 정 희 국 중앙동, 웅남동 | 박 해 정 더 반송동, 용지동 | 황 점 복 국 회원1·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 |
| | 김 해 란 국 팔룡동, 의창동 | 김 상 현 더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 서 명 일 더 회원1·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 | 김 남 수 더 봉림동, 명곡동 | 김 우 진 국 동읍, 대산면, 북면 |
| | | 남 재 욱 국 내서읍 | 성 보 빈 국 상남동, 사파동 | 김 해 란 국 팔룡동, 의창동 | 안 상 우 국 봉림동, 명곡동 |
| | | 김 묘 정 더 팔룡동, 의창동 | 오 은 욱 더 비례대표 | 박 승 업 국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 | 박 강 우 국 비례대표 |
| | | 진 형 익 더 비례대표 | 김 수 혜 국 비례대표 | 이 원 주 더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 김 미 나 국 비례대표 |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145회 임시회 (2025. 7. 17. ~7. 25.) 9일간 총 18건

의결목록

| | |
|--|------|
| •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원안가결 |
| •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
|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 원안가결 |
| •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의원발의 조례안 들여다보기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이바지”

창원시의회의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사전 공개·게시·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신설
- 출장경비 지출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

창원시의회의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재욱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생일휴가에 관한 사항 신설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일 일수 정비와 자녀 양육과 난임 치료를 지원을 위한 특별휴가 사항을 정함

“위원회 업무영역과 역할, 소관부서의 범위를 명확히”

창원시의회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정훈 의원
심사결과 수정가결



■ 주요내용

-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산업경제복지위원회’로 변경
- 미래전략산업국 조직의 포괄적 의미와 대표성을 가진 “산업”을 위원회 명칭에 반영하고자 함

“창원시의회의 청렴 수준 향상으로 시민의 신뢰 확보를”

창원시의회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홍용채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공직자’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청렴 의무 사항 명시
- 정기적인 청렴교육 실시하고 청렴도 향상 실현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 관리를”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해련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함
-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해촉 사유를 추가 신설
- 비엔날레의 예술적 방향성과 독립성을 강화

“지하안전관리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안전 확보를”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이우완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지하안전관리계획원 수립·변경, 중점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등을 규정
-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규정

의원발의 조례안 들여다보기

“창원국가산단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무상대부 1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대표발의 김남수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기간을 당초 '20년'에서 '10년'으로 수정
- 무상대부 기간 외의 사항은 기존 동의안의 취지를 유지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146**회 임시회 (2025. 9. 1. ~9. 12.)
12일간 총 30건

의결목록

| | |
|---|------|
| • 창원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 창원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 •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 원안가결 |
| •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마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2040 창원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
| •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 원안가결 |
|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 •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의원발의 조례안 들여다보기

“시민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

창원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정훈 의원

심사결과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규정
-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규정

“세무상담이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창원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홍용채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마을세무사의 역할과 상담대상, 상담방법, 상담실적 관리, 수당 등 제반사항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효과적 제공”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성보빈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 공휴일 등 소아 진료 공백 시간에 소아경증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
-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운영실태 조사, 홍보 등에 관한 사항

“현수막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미관 향상에 이바지”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승엽 의원

심사결과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을 정비하고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실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집회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기반을 마련”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전홍표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
- 빗물받이 적용범위와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야간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으로 지역 내 교통질서 개선”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성보빈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비사업용자동차의 야간 주차 점유율이 연평균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80% 감면과 500명 이상 구성된 단체와 사전계약 체결한 경우 50% 감면 신설

의원발의 조례안 들여다보기

“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황점복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따른 보험료, 어업재해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 등 어가의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 개선으로 재난 대응에 효율성·신속성 향상”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강우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부득이한 사유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차장이 모두 같은 사람일 경우 본부장이 지정하는 실·국·소장 중 1명을 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5분 자유발언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5분 자유발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 용 채 의원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 설치·관리해야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월 17일)



전통시장에 불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알림 설비’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월 새벽 1시, 광주광역시 송정 5일장에 불이 났을 때 화재 알림 설비 덕분에 6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해 대형 참사를 막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현재 창원시 내 76곳 전통시장 가운데 화재 알림 설비가 설치된 곳은 14%(11곳)에 불과하다. 또한 화재 알림 설비가 설치됐더라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9월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 당시 모든 점포에 화재 알림 설비가 설치돼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재 알림 설비 설치 유도 인센티브 △전문가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46.4%가 전기적 요인인 만큼, 근본적인 위험을 없애기 위한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성 보 빈 의원 (상남·사파동)

사파동성종합상가에서 쏘아 올린 작은공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월 17일)



‘사파동성종합상가’는 1992년 개장해 올해로 34년 된 전통시장이다. 현재 제과점·병원·식당·학원·미용실 등 88개 소규모 점포가 운영 중이다. 이곳은 1986가구 아파트 입주민과 주택가 30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장이다. 그러나 사파동성종합상가는 바닥 파손, 내외벽 도색 훼손 등 노후화가 심각하다. 특히 침하 때문에 기울어진 계단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은 언제 내려앉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상가는 2021년부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도전했으나 4년 연속 탈락했다. 올해로 5번째 도전인데, 경남도의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가 현장이 절박할 정도이다. 상가 곳곳에 침수 위험이 있고, 노후 전선으로 화재 우려가 있으며, 파손된 시설의 낙상 위험 등이 있다. 일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



이 정 희 의원 (중앙·웅남동)

공감을 얻지 못한 상징물 대상공원 '빅트리'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월 17일)



대상공원 '빅트리' 논란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에다 행정의 일방성, 형식적인 절차, 시민 소통의 부재 등이 집약된 결과이다. 빅트리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애초 무리한 벤치마킹으로 잘못된 출발이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경관위원회에서 전문가의 경고가 반복됐다는 것에 있다. 2019년부터 빅트리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전문가의 우려 의견이 있었다. “왜 하필 생태등급이 높은 곳에 설치하나”,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경관상 오히려 역효과 우려”, “기능도 미흡하고, 아름답지도 않다” 등 의견이 제기됐었다. 특히 경관위 위원들은 시민 공모나 소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럼에도 창원시가 “준공 일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공공조형물 사업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전문가 자문이 계획과 실행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천 수 의원 (구산·진동·진북·진전면, 현동, 가포동)

마산지역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충해야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월 17일)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재 마산·창원·진해 간 인프라 불균형을 보인다. 또한 창원시의 '파크골프장 500홀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파크골프장 8개소를 추가 조성해도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와 관련해 올해 7월 기준 창원시가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모두 9개소(207홀)이다. 이 가운데 창원지역 2개소(108홀), 진해지역 5개소(72홀), 마산지역 2개소(27홀)가 운영 중이다. 파크골프장은 2027년까지 창원지역 6개소(207홀), 진해지역 6개소(78홀), 마산지역 3개소(45홀)로 늘어난다. 현재도 불균형인데 2년 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 창원시는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고 있다. 마산지역 어르신들은 “마산은 창원시가 아닌가” 등의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에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된 진동면 인곡리에 36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



박 해 정 의원 (반송·용지동)

대상공원 빅트리 조형물 신뢰 회복부터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월 17일)



대상공원 '빅트리'가 홍물로 조롱받고 있다. 공공사업 추진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들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설계 변경 과정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빅트리는 2023년 4월 공사를 시작하고, 시공사는 같은 해 9월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성과 유지 관리 문제를 이유로 계획 변경을 제안했다.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가 착공 6개월 만에 안전성 문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도시공원위원회는 2023년 11월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듬해 5월 경관위원회는 공원위 판단과 달리 상층부 소나무 형상 제거를 최종 승인했다. 창원시 대표 조형물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물을 승인할 수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조형물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오 은 옥 의원 (비례대표)

우주항공 · 예술인재 양성 위한 교육환경 필요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월 17일)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 우주·항공, 예술 분야 고등학교 설립에 나서야 한다. 창원시가 명실상부한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도시임에도 전문 교육기관이나 인재 양성 시스템이 부족하다. 현재 창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회원사 20개 기업이 있다. 정부는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경남 등에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 중심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남의 중심 도시인 창원시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창원과학고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예술고등학교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창원에는 '창원예술학교'가 있으나 일반고 3학년만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계가 있다. 예술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립 예술고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황 점 복 의원 (회원1·2, 석전·회성·합성1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주변 교통개선 촉구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월 17일)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대에 조성하는 '자족형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 교통 혼잡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서마산 나들목(IC) 인근 북성로 일대의 차량 흐름이 우려된다. 이에 △북성초교~한효맨션 지하차도 설치 △마재고개~마산여중 우회도로 개설 △창원 내서~함안 여항 국지도 67호선 착공 등이 필요하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은 회성동 일원에 행정, 주거, 업무 기능을 집약해 2026년까지 조성된다. 이미 서마산IC를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 또 회성공영주차장에서 서마산IC 사거리까지 약 650m 구간에 5개 교차로 설치로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성로 지하차도를 통해 차량 흐름을 증대시키고, 마재고개~마산여중 우회도로를 통해 교통량을 분산해야 한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의 거대한 도심 기능이 교통망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교통체증, 소음 등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 우 완 의원 (내서읍)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본연의 기능 살려야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월 17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하 민주전당)의 임시 개관을 중단하고,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시·교육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민주전당 건립사업 시행 근거에 따라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보존해야 한다. 이어 공산·전체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라 우기거나 민주전당을 도시의 성장과 산업화 과정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전시물은 너무나 빈약하고, 그나마 있는 전시물에는 시민이 누구에게 항거했고, 왜 항거했는지 등 역사적 맥락이 빠져 있다. 오히려 마산의 산업화 과정을 전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한 장본인의 과오를 공적으로 덮으려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이다. '민주성지'라는 마산의 역사이자 정체성을 온전히 담아내고, 시민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김 묘 정 의원 (팔봉·의창동)

민주주의전당 정상화, 가치회복 출발점

제145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2차 본회의
(7월 25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하 민주전당)이 기능과 존재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간의 배치와 전시·콘텐츠 재구성이 시급하다. 민주전당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에 외국 명언을 새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어린이 공간에도 외래어가 과도하게 사용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민주주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성격과 맞나는 물음표가 뒤따랐다. 건물 내부 전체적으로 대부분 비어 있어 다소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마산 앞바다를 바라보는 휴게공간과 공간적 배치가 아쉬웠다. 마산 앞바다는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떠오른 곳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분노를 일으켰고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상징적 장소이자 중심이 되는 곳이다. 단순히 휴게공간이 아닌 민주화를 위한 싸움이 시작된 장소이자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장소이다. 하루빨리 민주전당이 민주주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



이 해 련 의원 (충무·여좌·태백동)

창원의 봄을 기억하십니까?

제145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2차 본회의
(7월 25일)



세계적인 비디오 아트 거장 백남준의 작품인 '창원의 봄' 복원을 위해 전담반(TF)을 구성해야 한다. 창원의 봄은 지난 2000년 백남준 선생이 완성한 작품으로, 10~25인치 브라운관 93대로 예술 정신을 구현한 문화예술 유산이다. 특히 백남준의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 이름(창원)을 담은 작품이다. 그러나 창원의 봄은 현재 매주 수요일 4시간씩만 가동하고 있다. 작품의 노후화, 기술의 단종, 그리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행정이 맞물려 창원의 봄은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있다. 창원시 역시 복원 철학과 기술을 모색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보존·복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현재 창원문화재단의 예산과 조직으로는 복원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민간 전문기업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예술이 살아 있는 창원'의 미래가 될 것이다.



서 영 권 의원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시내버스 통상임금'과 '파크골프장 운영개선

제145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2차 본회의
(7월 25일)



시내버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로 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업체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사례도 있다. 서울과 부산은 이미 법률 자문단과 대응팀을 구성해 조기 합의, 분할 지급, 가산금 면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창원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어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는 탄력적 개방, 안전 강화,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빠르게 날아가는 공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으나 창원시의 상당수 파크골프장에는 홀 간 안전망이 없거나 얇은 경계망만 세워져 있다. 특히 마산 호계 파크골프장 B구장 8번 홀은 스윙 방향이 9번 홀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어 충돌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또 창원시가 파크골프장 유료화를 시행하면서도 서비스는 미흡하다. 김해시는 에어컨을 설치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만큼 운영개선을 촉구한다.



백 승 규 의원 (가음정·성주동)

민주주의전당 자문위 구성, 신뢰회복 관건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7월 25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하 민주전당)과 관련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례가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명시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고수할 이유는 없다. 민주전당은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보존하는 북한역사문화공간으로, 개관을 앞두고 운영자문위원 위촉 논란이 벌어졌다.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면서 시민사회와 언론, 지역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법저체가 당연직 위원은 특정 직위에 의해 자동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민간이나 타 기관 인사는 부적절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인 조례와 관련해 원안에는 실·국·소장만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으나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회 이후 수정안 형식으로 의결됐다. 시의회에서조차 공개 토론 없이 변경됐다면 밀실 행정을 피할 수 없다. 자문위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해 소통과 통합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



박 강 우 의원 (비례대표)

장기 표류 대형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며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7월 25일)



창원시의 장기 표류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시행자 지위 박탈 등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 회생 신청으로 지연이 불가피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미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고, 이대로 간다면 매몰 비용만 늘어날 뿐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두 다른 이유로 지연되고 있지만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협의 부족, 책임 회피, 그리고 현실을 외면한 갈등 구조에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는 일이다. 표류 중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중립적인 조정기구 구성, 실무협의체 가동, 타당성 재검토, 우선순위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대형 현안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남 재 욱 의원 (내서읍)

마산, 과거의 영광을 넘어 미래로 다시 건질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7월 25일)



한때 대한민국 제7대 도시로 경남의 경제·행정·문화의 중심지였던 마산이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향의 도시, 민주화의 성지, 산업화의 중심지 등 이 세 가지 위대한 정체성은 마산의 큰 자산이었다. 하지만 2010년 통합 후 명칭도, 행정기관도 모두 창원에 몰려버린 구조적 불균형을 만들었다. 현재 마산지역 인구는 35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0만 명을 웃돌았다. 창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과 구도심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폐점한 지 1년이 넘는 롯데백화점 마산점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연면적 4951㎡에 달하는 마산시의회 청사는 현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사용 중이다. 마산지청은 2026년 완공하는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한다. 마산의 특성에 맞는 부서가 마산으로 이전하는 것 또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산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문 순 규 의원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파크골프장 유료화 정책 문제점 개선 방안

제145회
창원시의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7월 25일)



파크골프장 유료화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연회비 인하 △노년층 할인 기준 현실화 △계절별 운영시간 확대 △파크골프장 확충 △편의시설·안전장비 보완 등이 필요하다. 현재 10만 원인 창원시 파크골프장 연회비를 5만 원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파크골프장 연회비를 고려해 창원시도 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재 양산시는 7만 원, 밀양시는 5만 원, 통영·고성·창녕·산청 등은 무료다. 또 65세 이상은 50% 할인을 적용하고, 75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절기에는 저녁 7시까지, 동절기에는 일몰 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계절별 상황에 맞춰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수요만큼 파크골프장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파크골프장에 화장실, 그늘막, 식수대, 심장제세동기 등이 충분하지 않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전 홍 표 의원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시내버스 요금 인상만큼 서비스도 올려야

제145회
창원시의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7월 25일)



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시민의 신뢰·서비스도 함께 올려야 한다. 창원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일반인 기준 200원 인상된다.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100~150원 오른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더라도 공공요금마저 오르는 현실은 시민에게 큰 부담이다. 특히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요금 인상에 걸맞은 체질 개선과 서비스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친절도 향상과 기사 교육 내실화 △노선 다양화 및 교통 소외지역 해소 △환승 편의성 확대와 배차 간격 합리적 조정 △승하차장 시설 개선 및 차량 청결도 유지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요금 인상이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면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성이 나타나야 한다. 또한 버스 업체도 자구 노력을 게을리해선 절대 안 된다.



김 남 수 의원 (봉림·명곡동)

사화공원 공사, 명서2동 주민 피해 해결을

제146회
창원시의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월 1일)



사화공원 개발 공사로 인한 명서2동 주민들의 피해 해결을 촉구한다. 주민들은 2021년 10월 공사 시작 후 먼지 날림과 소음은 물론, 주택 균열과 누수 등이 발생했다고 호소한다. 주민들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지난해 10월까지 창원시와 12차례의 민원협의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창원시와 시공사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 창원시와 시공사에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보상을 요구한다. 사화공원 사업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명서2동 주민들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주민들이 고령이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창원시와 시공사가 무시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



최 정 훈 의원 (이동, 자은·덕산·풍호동)

방치된 진해변전소, 활용 계획 마련 시급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월 1일)



2022년 착공한 진해변전소 옥내화 사업이 준공 목표를 넘겨 지연되고 있다. 원인은 고객 전용선로 인출 변경과 관련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구매업체 간의 협의 난항, 잔여 부지 활용 문제 등이다. 한전은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잔여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사업비 충당만을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는 1만 2,631㎡ 규모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주변 도로를 개선해 달라고 희망하고 있다. 변전소 옥내화 사업은 단순히 미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 안전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김 혜 란 의원 (팔룡·의창동)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창원이 되어야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월 1일)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2023년 9월 제127회 임시회 때도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4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출생아 수는 1만 3,100명으로, 10년 만에 처음 반등했다. 합계출산율도 0.83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창원시의 출생아는 4,400여 명으로 도내 최다였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과연 창원시는 정말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도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은 거창, 사천에도 설립될 계획이다. 창원시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저출생 극복 의지를 천명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김 미 나 의원 (비례대표)

수영장 플라스마 수처리 시스템 도입해야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월 1일)



창원시 공공 수영장에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마 수처리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수영장 물은 일년내내 물을 갈지 않고 소독제만 넣어서 걸러내는 시스템이고 염소소독제와 땀, 소변이 반응하면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이에 수질 관리에서 플라스마 수처리 기술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은 화학약품 없이도 살균과 탈취 효과가 뛰어나고, 부산물 생성도 최소화할 수 있다. 플라스마 수처리 기술은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로도 유해 오염 물질과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들더라도 약품 사용 절감, 유지관리 비용 감소, 시민 건강 증진 등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성 보 빈 의원 (상남·사파동)

황톳길 방치하면 고생길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1차 본회의
(9월 1일)



올해 초, 지역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성산구 대방동 368-1에 대방 경관녹지 맨발걷기 황톳길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맨발걷기 황톳길 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 △세족장 등 기본 편의시설 추가 확충 △배수 및 유실 방지 구조 설계 △장마철 유실 구간 점검 △긴급 복구 등 사후관리 예산 확보 등이다. 지난 2월 기준 창원시에는 의창구 13개소, 성산구 14개소, 합포구 11개소, 마산회원구 19개소, 진해구 10개소 등 총 67개소의 맨발 걷기 길이 운영 중이다. 유실과 방치가 지속되어선 안 된다. 이에 계절별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창원시가 '더 걷기 좋은 건강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 원 주 의원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마산해양신도시, 시민 활력 공간으로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1차 본회의
(9월 1일)



마산해양신도시 공공개발구역 일부에 '파크골프장'을 임시로 조성해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수년째 방치된 땅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지금 최선이다. 마산해양신도시는 5차례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됐으나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체 면적 64만 2,167㎡ 중 공공개발구역은 43만 9,048㎡다. 이 같은 제안은 현재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적합한 부지는 부족하고 특히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마산합포구는 파크골프 이용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파크골프장은 향후 용도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권 성 현 의원 (동읍, 대산·북면)

어르신 이용 파크골프장 복지 개선해야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1차 본회의
(9월 1일)



고령사회에서 여가와 건강은 중요한 복지이므로,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해야 한다. 파크골프장 유료화는 오히려 어르신들의 이용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으로 파크골프를 즐기기 어려운 노인이 많아질 수 있다. 파크골프는 사회적 교류에도 큰 도움이 되어 '시니어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고 있다. 이용료 면제 등이 실현될 때, 모두가 즐기는 진정한 건강·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아울러 북면 지역에는 파크골프장을 확충해야 하며, 하천 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89홀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정 순 욱 의원 (경화·병암·석동)

통합 15년을 돌아보면서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월 1일)



2010년 진해·마산·창원이 통합되어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 비효율적이고 기대 효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 통합 당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재정 확충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5년 동안 보통교부세는 출범 이전 5년보다 52.7% 감소했다. 도시 규모가 커진 창원시는 자체 수입 능력이 높다고 평가되어 지원이 줄어드는 역차별까지 발생했다. 통합 창원시는 구조적인 재정난과 효율성 부재에 직면해 있다. 진해는 진해답게, 창원은 창원답게, 마산은 마산답게 하기 위해 각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김 영 록 의원 (가음정·성주동)

창원 연고 프로스포츠구단에 공평 지원을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9월 12일)



창원시가 NC다이노스에 올해부터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면서 다른 스포츠 구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 이후 연고지 이전 문제가 대두되자, 창원시는 NC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상황이다. 하지만 프로 농구팀 LG세이커스는 올해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지역 팬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나 홈구장의 노후화 문제로 구단과 선수단, 팬들의 불편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LG세이커스의 홈구장인 창원체육관은 국제농구연맹(FIBA)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전광판, 녹물이 나오는 화장실 등 탓에 초라해 보인다. 다른 지역 지원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래기간 지역에 머무르던 연고 구단을 떠나보냈다는 낙인이 한 번 찍히게 되면 다른 구단을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창원시가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창원시체육회에 소수 체육단체 대한 아낌없는 지원도 당부했다.



박 선 애 의원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폭염에 야외근로자 안전대책 마련 필요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9월 12일)



기후위기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지난해 대비 28% 증가하고 9월까지도 폭염경보가 발효되면서 폭염이 상시적 재난으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그늘 한점없는 야외 노동 현장에서는 '휴식시간이 더 힘들다'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동형 그늘막이나 간이 냉방 컨테이너를 설치해, '휴식 시간 권고' '무더위 심터' 운영 등 권장 위주의 행정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야외용 냉방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임차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유도하는 정책 검토와 폭염경보시 작업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환경미화, 공공근로, 도로보수 등 야외 업무 종사자에게 선도적으로 적용한다면,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쉼, 그것은 선택이 아닌 노동자의 권리'이다. 이제 행정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김 상 현 의원 (충무·여좌대백동)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체계 마련 촉구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9월 12일)



창원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군항상권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역 정체성과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들 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도시 활력을 되찾는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진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사업 완료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 청계천, 경춘선 숲길공원, 부산 감천문화마을 등은 지속적인 관리와 콘텐츠 보강을 통해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에 창원시도 안정적인 예산 확보, 전문 인력 배치, 장기적 운영 로드맵 수립, 정기적 성과 평가 시스템 마련 등 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조성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재생사업의 진정한 완성이다. 창원시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 모델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서 명 일 의원 (회원1·2, 석전·회성·합성1동)

미끄럼 방지 페인트, 시민 안전 위협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9월 12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색한 미끄럼 방지 페인트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미끄러워서 사고 위험을 키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 점검 △도색 방식 개선 △재료 개선 등이 필요하다. 미끄럼 방지 페인트에 석인 돌 알갱이는 도색한 후 차량에 의해 쉽게 마모된다. 결국 코팅막만 남아 비 오는 날에는 빙판길처럼 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실제로 함양, 전주, 군포, 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이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시 버스 기사 사이에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자전거 도로도 같은 문제가 있다. 1년마다 정기 점검을 통해 마찰력 충족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또 포장재를 도로 전체에 칠하는 것이 아닌 부분 도색으로 마찰력을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해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미끄럼 방지 효과가 높은 다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심 영 석 의원 (웅천동, 웅동1·2동)

웅천 역사 문화 계승·발전 대책 마련 촉구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9월 12일)



창원시는 2020년 490억 원 규모로 웅천 역사문화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웅천에는 웅천읍성, 웅천빙고지, 자마산성, 웅천왜성, 하마비, 주자정동, 효장각, 왜관터 등 역사·문화 유산이 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18명의 자문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웅천읍성 한마당 축제'를 4년째 진행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진해문화유산지킴이'를 결성해 웅천향교 하마비 환원, 진해 금석문 탁본 85점과 웅천읍성 명문석 탁본 10점 추가 발굴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사·문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데 비해 경남도와 창원시의 전담 부서의 활동은 미약하다. 경남도는 창원시에 예산 반영을 떠넘기고, 창원시는 도 문화재라고 떠넘기는 핑퐁 게임을 4년째 반복하고 있다. 웅천의 역사와 문화에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 은 옥 의원 (비례대표)

결혼 비용 절감, 공공예식 활성화 제안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9월 12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평균 비용은 2,074만 원에 이르고, 식당 대관비는 150만~390만 원, 스프메 비용은 약 292만 원 수준이다. 창원시는 진해아트홀, 창원의집 등을 공공 예식장으로 제공하나 단순히 공간만 내어주는 방식은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어렵다. 예비부부가 원하는 공공예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발굴하고, 장식과 프로그램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저렴하고 실력 있는 스프메 업체를 발굴·홍보하고, 착한가격 제도를 도입해 비용 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 체면과 비용 사이에서의 고민이 아닌 기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박 승 엽 의원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허성무 국회의원은 무엇을 위해 정치하는지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9월 12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과 관련해 일부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정식 개관을 방해하고 있다. 창원시 전 시장 허성무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단체의 의견이 마치 창원시민들의 의견인 것처럼 대변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분통해하고 있다. 창원시와 시민을 생각한다면 노력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이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연간 300여억 원, 20년간 수소를 구매한다는 '구매 확약 담보'를 제공했다. 해당 대형 사업의 실패로 창원시 재정과 미래가 큰 위기임에도 허성무 전 시장은 관심 한번 가지지 않는다. 창원시의회 특위 참석 요구에도 불참하고, 국회에서도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허성무 의원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제라도 액화수소플랜트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진 형 익 의원 (비례대표)

의창·성산지역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해야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9월 12일)



의창·성산구 지역을 아우르는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이용자가 너무 많아 복잡하다는 지적과 나이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여달라는 주장, 급식 인원이 부족하다는 요구 등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복지관 신규 회원은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에는 의창노인복지관 855명, 성산노인복지관 1,136명, 마산합포노인복지관 885명이 신규 등록했는데, 2024년에는 각각 1,080명, 1,360명, 976명으로 증가했다. 성산노인복지관을 예로 들자면 하루 1,400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데, 관리 인력은 14명에 불과하다. 또 120석 규모인 식당에서 하루 500인분 가까이 제공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요 분산이 필요하다. 현재 마산·진해 지역에서는 분관을 운영하고 있다. 의창과 성산은 본관만 운영하고 있어 한계가 분명하다. 의창과 성산 지역을 아우르는 분관 설치가 절실하다.



시정질문 및 답변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시정질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2차 본회의 - 9월 4일

전 홍 표 의원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Q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현행 행정적·정치적 조치 및 대응 방안은?

A **시장 권한대행** 공공개발에 대한 요구를 강조해 나가겠다.

Q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 지연과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둘러싼 항소심과 집행정지 가처분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계획은?

A **시장 권한대행** 세금 낭비와 행정 신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과거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편향성,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 일부 왜곡된 확인서 등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재감사에 대한 의향은?

A **시장 권한대행** 상황을 가정해서 예단할 수 없다.

Q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근본 원인이 된 가포신항 조성 시 잘못된 물동량 예측이 있다. 정부에 정책 실패를 요구하고, 공공개발 또는 투자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A **시장 권한대행** 국비 투입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 없다면 국비 공모 신청 등으로 추진하겠다.





시정질문 및 답변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2차 본회의 - 9월 4일

문 순 규 의원
(양덕·합성2, 구암1·2, 봉암동)



Q 팔룡근린공원 밤골여울마당 조성사업이 무엇인지?

A 푸른도시사업소장 직무대리 어린이 테마존 조성사업으로 2023년 7월 14일 최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총사업비는 18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이다.

Q 테마존 조성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는데?

A 푸른도시사업소장 직무대리 타당성조사는 어린이 체험 마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다. 빨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

Q 창원시는 상복공원 조성 당시 시의 정책 사업에 생존의 터전인 자신들의 땅을 내어준 주민들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주민 갈등을 위한 중재 계획은?

A 복지여성보건국장 편입지구회와 중재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Q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창원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에 따른 대응책은?

A 미래전략산업국장 AI와 IT분야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





시정질문 및 답변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9월 4일

정 순 욱 의원
(경화·병암·석동)



Q NC다이노스가 요구했던 21가지 개선안은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시민들의 동의 없이 혈세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NC가 1346억 원의 지원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연고지 이전 계획이 있는 것 아닌지?

A **시장 권한대행** NC와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창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Q 마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대응이 없다. 오히려 연고지 이전에 찬성하는 것이 아닌가?

A **시장 권한대행**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함께 협력하고 있다.

Q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전시가 마산지역의 민주화 투쟁 역사를 무시한다.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조례에 대해 시장이 재의요구권을 하지 않은 이유는?

A **시장 권한대행** 집행부가 시의회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석동 청사와 상공회의소 건물이 현재 몇 년째 방치되고 있다. 활용 방안은?

A **시장 권한대행** 리모델링해서 기관 등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





시정질문 및 답변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2차 본회의 - 9월 4일

이 종 화 의원
(이동, 자은·덕산·풍호동)



Q 등록 경로당은 냉난방비 지원을 받으나, 미등록 경로당은 사각지대에 있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폭염·한파 쉼터로 지정하고 지원할 의향은?

A **재난대응담당관 직무대리** 시에서 운영 주체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Q 정부의 준경로당 제도 도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 실태 파악과 지원이 시급함.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은?

A **복지여성보건국장**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

Q 고사목 증가와 관리 미흡으로 벚꽃 생태계가 위협받음.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한 장기 로드맵과 대체 식재를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A **시장 권한대행** 100% 공감하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

Q 출산·육아 당사자들의 80% 이상이 출산·육아 공공 앱 구축을 요구하는데 시의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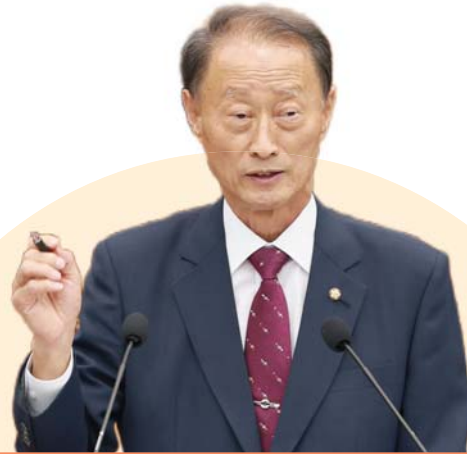
A **시장 권한대행** 전적으로 공감하며 구축방안을 고민하겠음.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3차 본회의 - 9월 5일

손 태 화 의원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Q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심의 등의 아무런 절차 이행 논의도 없이 민간 연구기관에 5년간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협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시장 권한대행** 공유재산심의회도 했고 의회 의결도 거쳐 양여했다.

Q '빅트리' 조형물이 34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사업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A **시장 권한대행** 건설사가 일부 사업 관련 자료 제출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사업 완료 이후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

Q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가 단순한 사후 검증만으로는 시민들의 의혹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

A **시장 권한대행** 필요하면 감사를 통해서라도 점검하겠다. 사업비 문제는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빅트리의 장단점 파악과 시설 개선 방안을 찾아 창원의 상징적인 심터로 만들겠다.





시정질문 및 답변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9월 5일

구 점 득 의원
(팔룡·의창동)



Q 공원일몰제로 인한 팔룡공원 토지 보상이 비합리적으로 이뤄졌다. 팔룡공원은 급경사지인데 평지에 있는 다른 공원보다 몇 배 높은 가격으로 보상됐다. 경사도 18도 이상 지역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도 20도 이상이 70%를 차지하는데 마구잡이로 매입했다. 이유는?

A **푸른도시사업소장 직무대리** 2025년 5월까지 보상하지 못하면 공원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8필지를 우선 검토했다.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최선의 결과이다

Q 체계적으로 검토했다면 공시지가 기준 15억 원이 소요되는 8필지 대신, 8억 원으로 합리적인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는데 이유는?

A **푸른도시사업소장 직무대리** 그 당시에는 실효 될 우려가 커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Q 팔룡공원은 시 공원일몰제 현안 중 가장 깊은 모순을 안고 있다.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A **푸른도시사업소장 직무대리** 공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겠다.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9월 5일

박 선 애 의원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Q 진해신항 항계선 조정 문제는 단순한 항만 관할 구역의 조정을 떠나 수천 명의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정부의 부산항 항계선 조정으로 진해신항이 부산항 관할로 편입될 우려가 있다. 시의 대응책은?

A **해양항만수산국장** 2020년 12월 31일 해수부 제2020-231호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정되었고 올 연말 조정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 안타깝지만 정부 관할이라. 시차원에서 대응할 방안이 현재로서는 딱히 없다.

Q 27년 진해신항 일부 개항과 함께 마산항 물동량 감소에 따른 공동화 현상과 고용 축소를 대비한 시의 대응책은 있는지?

A **해양항만수산국장** 해양항만수산국장= 현재 마산항 화물 유치 보조금 지원 조례를 통해 13년간 60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외 항만센터 건립 등 지원방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다.

Q 마산항, 진해항 또 진해신항을 연계해서 창원시를 경남 항만권의 독립적인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전략은?

A **해양항만수산국장** 국제물류특구지역 지정을 이뤄내어 진해신항을 독립적인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시정질문 및 답변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3차 본회의 - 9월 5일

박 해 정 의원
(반송·용지동)



Q 액화수소플랜트 지체보상금 소송비 대납'은 창진원의 정관과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한 불법자금 운영이다. 시인하는가?

A **창원산업진흥원장** 자체내규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시행했다.

Q 불법자금운영에 대한 조사·감사 의뢰 계획은?

A **시장 권한대행** 창진원의 소송비 대여가 심각한 비위 행위인지 내부 검토해 보겠다.

Q '액화수소생산시설 검증위원회 최종의견서'를 숨기고 시설 검증이 안됐다면 사업을 파행으로 몰아간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소지가 크다. 신속한 조사·감사 계획은?

A **시장 권한대행** 시정답변을 준비하며 알게 된 최종의견서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Q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소 버스 확대다. 창원시의 실행계획과 효성이 추진 중인 가포 액화수소충전소 착공 지연 관련 행정적 지원 계획은?

A **미래전략산업국장** 현 단계에서 수소차 확대와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이다. SK·효성 대기업을 만나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을 해나가겠다.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3차 본회의 - 9월 5일

정길상 의원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 Q** 만날공원 버스, 대형 버스 주차장에 대한 용역 진행 상황과 목적은 무엇인지?
- A** **푸른도시사업소장 직무대리**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02년 10월에 진행했으며, 목적은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개장에 따른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 Q** 용역 결과대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 A** **푸른도시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요시에 하게 되어 있다.
- Q**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한 주차장을 조성 사업이 마산합포구는 한 곳도 없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 A** **교통건설국장**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구청별로 1개 정도 선정해 확보율을 높이겠다.
- Q** 만날공원 주차장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행정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데?
- A** **시장 권한대행** 주차 수요 상황을 한 번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다.
- Q**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서 진행할 의향은?
- A** **시장 권한대행** 세심하게 신경쓰겠다.





시정질문 및 답변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3차 본회의 - 9월 5일

백 승 규 의원
(가음정·성주동)



Q 2019년 지정된 불모산 강소연구특구 지정이 6년이나 지났음에도 성과가 없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A **미래전략산업국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제시된 사업 추진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Q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4년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용도로 환원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강소특구 부지를 주거지로 전환할 가능성과, 장기간 협의 과정으로 시민 불편에 대한 대응 방안은?

A **시장 권한대행** 환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강소특구는 창원의 미래산업을 견인할 중대한 사업이다. 더 이상 변명은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창원시는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내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전환까지 검토할 의향은?

A **시장 권한대행** 필요 시 대안도 검토하겠다.

Q 강소특구 용도를 아파트 단지로 바꾸어 인구를 유입하면 발전이 기대되는데?

A **시장 권한대행** 대안은 될 수 있다고 본다.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3차 본회의 - 9월 5일

박 승 업 의원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Q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창원시의 분명한 입장은?

A **시장 권한대행**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Q 창원시가 수천억의 혈세가 들어간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특정감사의 범위와 현황을 공개할 의향은?

A **시장 권한대행** 결과에 따라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Q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정상화만을 내세우는 것은 실무자와 결정권자 모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을 남기게 된다. 왜 창원시가 책임자 규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지?

A **시장 권한대행** 기존 감사관이 계약만료로 공석이 되고, 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전보가 되었을 뿐이다. 서둘러 보겠다.

Q 시민의 혈세가 책임 없는 행정으로 인해 계속해서 소모되고 있는데 앞으로 창원시의 대안은?

A **시장 권한대행** 최대한 해결방안을 찾겠다.





시정질문 및 답변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3차 본회의 - 9월 5일

김 상 현 의원
(충무·여좌·태백동)



Q 옛 육군대학부지 조경공사 중 이식한 해송의 환수금액 적정성과 이식후 조경공사 하자이행 관리 부실 질의.

A **도시공공개발국장** 환수시 용역을 통해 금액을 산정하여 환수 조치했으며, 고사목은 구청에서 벌목 처리했고 관련 업무도 구청에 인수인계를 완료했다.

Q 구육대부지 준공후 이관받은 나무에 대해 소멸시효전 환수 청구와 처리계획은?

A **진해구청장** 하자보증시효 확인하고, 향후 재식재 검토하겠다.

Q 진해 내수면 맨발걷기·수변데크 사업 설명회와 시공 차이, 화장실 등 누락.

A **구청장** 화장실은 현장 확인 예정. 수변데크는 안전상 국립수산과학원 요청으로 추진됐다.

Q 도시재생사업의 사후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제도 마련 계획은?

A **시장 권한대행** 사후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
사후관리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해양수산부는 잘못된 물동량 예측을 토대로 마산항 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옛 가포해수욕장을 매립하여 '가포신항'을 건설하고, 3만 톤급 선박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마산만을 대규모로 준설해 수심 12.5m의 항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가포신항 인근 마산 앞바다에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해양생태계 훼손, 해수질 오염, 도시 경관 저해 등 수많은 환경적·도시적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마산시와 통합 창원시는 준설토 투기장 부지를 '마산해양신도시'로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민간자본 3,835억 원(2024년 기준)을 들여 인공섬 조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애초에 계획된 개발이 아니라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임기응변적 대응이었으며, 결국 현재까지도 마산해양신도시는 방치된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창원시가 부담한 인공섬 건설비용 가운데 994억 원의 원금이 남아 있고, 이미 지급한 이자만 400억 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국책사업의 실패가 지방정부에 재정적 부담과 도시발전의 지체를 초래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최근 부산 동구의 임대건물로 연내 본부를 이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산해양신도시 부지는 바로 해양수산부가 초래한 문제의 결과물이며, 단지 부산 이전을 결정했다고 해서 과거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해양수산부는 마산해양신도시가 국가 해양개발 정책 실패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

하나. 마산해양신도시를 해양수산부 유관기관 및 공공기능의 거점지로 적극 검토하여, 해당 부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하나. 해양수산부는 준설토 투기장 조성의 후속조치로써, 해양환경 복원, 해양문화·관광기능 연계, 해양산업지원 복합시설 유치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하나. 정부는 마산해양신도시의 공공적 활용과 지방정부의 재정 회복을 위해 국비 지원과 특단의 재정대책을 마련할 것.

국가가 결정한 국책사업이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고,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결자해지의 책임감으로 마산해양신도시를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산업의 재도약 거점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때입니다.

창원시는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기다리며, 해양수산부가 자신의 정책적 결과물에 대해 실질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창 원 시 의 회

국가유공자 지원 지역 불균형 해소 건의문

현재 대한민국에는 2024년 기준 833,042명의 보훈대상자가 있으며, 이 중 국가유공자는 655,662명으로 전체의 약 7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수많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5.5%, 2024년 5.0% 등 2년 연속 보상수준을 인상했으며, 거동이 불편해 생활조정수당 등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위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보훈 지원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보훈 정책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장관 명의의 표창을 수여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전수당 인상을 유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25년 1월 기준 정부는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다수의 지자체가 참전수당을 인상해 왔습니다. 그 결과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참전수당을 합산한 전국 평균 지급액은 월 23만 6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초지자체의 참전수당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수당을 합산한 지급액은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충남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와 강원도 화천군이 각각 5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역과 기초지자체 수당을 합산하면 최대 60만 원에 이릅니다. 경상남도 내에서는 산청군과 거창군이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수당 합산해 총 3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현재 총 2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에 따라 보훈 지원금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예우는 더욱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가 거주지역에 따라 수십만 원의 수당 차이를 겪는 것은 정당한 보훈 정책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약속한 ‘더 두터운 지원’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훈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인 만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훈 지원금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등 보훈 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국비 부담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 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유공자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동등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일관된 보훈 정책이 구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간 보훈 격차를 해소하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등 보훈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을 대폭 상향하여, 전국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모든 국가유공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 간 보훈 정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 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통일된 보훈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모든 국가유공자가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후보자 책임명·지명 촉구 건의문

현재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른 초대 내각 구성을 위한 인선 절차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도덕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을 무리하게 지명하거나 임명하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

수많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민낯이 다 밝혀졌지만,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함께 가야 할 비즈니스 메이트인 보좌관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제기되었다. 지명 초기 논란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는 논란에 대해 부인했으나 이후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우려되는 것은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과 공직자 윤리와 사회 정의 실현에 위배 되는 후보자를 두고 대통령실은 방관자의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해당 후보자는 국민의 공분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까지 이어지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미 임명이 되었지만 한 후보자의 경우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내부 정보 활용으로 재산 증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후보자와 「농지법」을 위반하여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가족처럼 지낸 지인과 공동 경작을 했다고 설명하는 후보자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세금 탈루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된 후보는 가족 간 월세 계약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면 편법 증여를 인정하는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등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였다면 해당 후보자들은 7대 인사 배제 기준 중 부동산 투기에 해당되어 임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 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격 없는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을 무시하고, 기준을 무너뜨리는 인사가 계속 된다면 국정 신뢰도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국민을 기망한 책임은 모두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고 자격 없는 장관 후보자 지명과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장관급 인선에 대한 인사 배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라.

하나. 대통령실은 명백한 도덕성 결여, 갑질 등 국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적극 검토하라.

하나. 대통령실은 청문 자료 의무 제출, 국민 참여형 검증제도 도입 등으로 검증을 강화하고 후보자의 이력과 행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정을 통해 적합 인사로 책임명·지명하라.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문

최근 북한 평산지역 우리농정련공장에서 발생한 침전지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어 한반도 하천을 따라 우리 해역으로 유입되었다는 심각한 정황이 여러 매체와 위성사진,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 침전지 폐수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오염된 폐수가 예성강을 거쳐 강화만, 경기만, 그리고 서해로 광범위하게 흘러 들어가는 상황은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서해 인근 지자체와 주변국에게도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방사능 오염사건은 단순 환경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권 침해, 해양생태계 교란, 수산업·어업 등 경제영역 손실, 미래세대 위험까지 포괄하는 국가적 위기임에 틀림없다. 전국 각지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현장조사, 신속한 방사성 물질 검증, 객관적 시료분석 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외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도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그리고 투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7월 4일부터 2주간 한정적으로 10개 지점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 방식과 범위, 투명성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위성 이미지만으로는 방사성폐수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는 만큼 민관합동 조사단의 실질적 현장 조사와 과학적 시료분석이 시급하며,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 불안 해소의 첫걸음임을 직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북한 핵 폐수 방류의 피해가 인접국, 국제사회에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IAEA 등 국제기구와의 실질적인 협력과 국제적 감시체계 구축 역시 필수적이다. 1896년 캐나다 트레일 제련소 사건처럼 방사능·중금속류 폐수의 장기 해양오염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을 교훈 삼아 우리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북한 우리농정련공장 침전지 폐수의 방류 실태와 그로 인한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에 대해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단기간의 표본조사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 체계를 마련하여 서해 및 인접 해역의 환경 변화와 방사선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여, 현장 시료 채취와 독립적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나, IAE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주변국, 국제사회와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방안을 강화하여, 국제적 신뢰와 국민적 안심을 확보하라.

하나, 그 결과 방사성 오염 우려가 실재할 경우 국민 건강 보호대책 마련, 해양·수산업 피해 지원, 외교적 항의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와 국가 환경주권 수호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과학 기반의 위기 대응 체계를 재구축하라.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소규모 건축 시장 부실 시공 근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문

소규모 건축 시장은 대한민국 건설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시장 침체와 부실 시공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요건 강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역설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했고 허술한 관리 시스템으로 소규모 건축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 졌다. 주거 형태의 다양화와 도시 재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소규모 건축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금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그리고 건축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과감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이하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했으나 2018년부터 그 기준을 200㎡로 대폭 강화하여 연면적 200㎡가 넘는 주거·비주거용 건축물과 다가구·다중주택 등을 건설업을 등록한 정식 건설사만 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전 강화와 위장 직영시공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이며 특히 창원과 같은 계획도시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이다.

경기도 감사관실의 최근 감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었는데 4층 이하 빌라, 다세대 건축물, 2~3층 규모의 상가 건축물 상당수가 무자격 건설기술자에 의해 건축되었음이 밝혀졌다. 현행법상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하며 현장별로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달랐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1만 7천여 건의 조사 대상 건축 현장 중 무려 6천777개소에서 등록된 건설 기술자가 578명에 불과하여 건설기술자 1인이 평균 11.7개의 현장을 관리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격증 대여는 불법적인 면허 대여와 합법적인 면허 대여(건설 회사에 입사하여 시공) 두 가지 형태로 나뉘지만 결과적으로 현장에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을 초래한다. 불법적인 면허 대여는 유령 회사와의 계약으로 이어져 건축주에게 큰 위험을 안기며, 합법적인 형태 또한 공사비 상승의 요인이 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무자격 기술자 관리가 실제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감사관실이 샘플로 확인한 5개 건축 현장 중 3개소에서 기술자 자격증 대여가 확인되었고 해당 공사장에서는 내력벽 임의 생략, 철근 부족, 콘크리트 미충진 등 심각한 부실 시공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건축주의 재산 손실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허위 신고가 가능한 현행 신고 시스템과 현실과 동떨어진 법적, 제도적 미비점에 있다. 소규모 주택 건축을 위한 종합 건설 면허 기준이 5명 이상의 기술 인력을 요구하는 등 소규모 건축 시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건설업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종합건설회사는 사실상 소규모 건축 시장에 참여를 거의 하지 않고 소규모 건축업자는

기술 인력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여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실제로 소규모 건축 시장이 침체되어 유관 업체나 기술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건축 요건의 강화로 면허의 불법 대여와 책임 전가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변화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현행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건의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소형 건설업 면허를 신설하고, 건축물 규모에 따른 면허 세분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행 종합 건설 면허 제도만으로는 소규모 건축 시장의 현실과 전문성을 담아낼 수 없다. 소규모 건축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면허를 신설하고 아주 작은 규모의 건축부터 단계별로 면허 기준을 세분화하여 각 규모에 적합한 역량과 조건을 갖춘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불법적인 면허 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건축주에게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공 환경을 제공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소규모 건축인들에게는 정당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둘째, 건설 기술자 관리 및 신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현행 시스템은 건설 기술자 자격증 대여 및 허위 신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건설 기술자의 현장 배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중복 관리를 철저히 제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격증 대여를 통한 무자격자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는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공사 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다.

셋째, 소규모 건축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정히 해야 한다. 자격증 대여를 통한 부실 시공 적발 시 강력한 행정 처분 및 사법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 및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여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언제나 중요하다. 소규모 건축 시장의 건전한 성장은 단순히 몇몇 건축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현장의 목소리와 감사 결과를 경청하고 소규모 건축 시장의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문

기후·생태 위기를 방지한다면 우리 모두의 생존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대형 산불과 산사태로 인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생태계 훼손은 현실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재난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가시화하고 있다.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농축산물 피해는 물론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한 정전 우려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극한 호우로 인해 도시 침수, 교통두절, 인명피해 등 재난이 반복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 재난은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질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는 산업의 존속과 노동자의 삶,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의제다. 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기계·방위·첨단 제조업이 밀집한 창원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산업 중심 도시의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다.

현재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주요 산업단지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력망과 변전설비의 한계는 뚜렷하다. 이는 RE100 달성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도 장애가 될 수 있어,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전력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창원산업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탄소중립이라는 대의 아래 산업계·노동계·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원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과 창원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익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폭염·극한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저감(도심열섬 완화, 에너지 취약층 지원)과 침수 예방(배수망 정비, 하천 생태 복원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국가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부금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주요 산업거점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라.

하나.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산업계·노동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정한 전환 지원계획을 수립·지원하라.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인구감소지역 지정 법령 개정을 통한 창원시 '구(區)' 단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문

창원시는 2010년 행정구역 자율 통합으로 마산·창원·진해 세 개 시가 통합되어 5개의 비 자치구(행정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전체 고령화율(65세 이상 고령인구)은 2025년 6월 기준 20%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경제 활동 인구의 급감, 청년 유출 등으로 중심 상권 침체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단위를 시·군·구로 한정함에 따라, 창원시처럼 행정구역 개편으로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區)' 단위를 둔 도시에서는 인구감소와 행정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창원시와 같은 비 자치구는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창원시 행정구별 평균 인구는 인근 부산시 자치구의 평균 인구와 유사한 수준이며, 행정구 면적은 자치구 대비 광범위하고 많은 행정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수한 지방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령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근본 취지를 담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정책 공약인 인구 소멸 위기 지역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한다.

하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행정구(區)의 위기 해소 및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을 통해 정책 수혜 형평성 제고 및 자율행정 통합 도시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촉구 결의문

한국지엠은 지난 201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2027년까지 국내 생산시설 유지를 조건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7억 5천만달러의 투자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 만료를 불과 2년 앞둔 2025년 5월, 한국지엠은 창원정비센터를 포함한 일부 자산의 매각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은 다시 구조조정과 공장 철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창원공장은 2018년 구조조정 당시 조립부 통합과 대규모 희망퇴직을 통해 고통을 분담한 상징적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산 매각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수출액은 약 36억 달러로, 이는 창원시 전체 수출액(228억 달러)의 15.7%를 차지하는 것이다. 현재 협력사를 제외한 직접 고용 인원은 약 2,800명이며,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관련 종사자는 약 2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지엠의 철수 또는 생산 축소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전체 산업과 고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창원시의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GM 본사는 2018년 체결한 계약 이행에 적극 나서고, 지속적인 창원공장 운영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창원공장의 수출 기여와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엄중히 인식하고, 한국지엠의 생산 축소나 철수를 막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한국산업은행은 GM 본사의 투자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창원공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주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진해 「가덕도신공항-진해-창원」 철도 및 트램 노선 구축계획 반영 요구 건의문

진해 동부권은 웅동1동, 웅동2동, 웅천동의 주거지역과 부산·진해신항 전체 면적의 약 75.6%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에는 67,000여 명의 내국인과 7,500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약 186,700명의 근로자가 항만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기간산업으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제2창원국가산단, 진해신항, 국가지역전략사업 등의 사업과 함께 창원·진해국가산단, 마산자유무역지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동남권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기간산업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하면서 진주, 여수, 강릉, 삼척 등 대부분의 지방 거점도시는 수도권에서 3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됐지만, 동남권의 핵심지역인 진해는 국가 철도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있고, 도시철도(트램) 노선에서도 제1차 타당성 조사에서 진해 동부권은 제외된 상황입니다.

또한, 진해 동부권(항만배후도시)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형 화물차, 초대형 화물선, 항만 부지 조성 등으로 인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소음 수치가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 취약지역이기도 합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항만 개발로 인해 28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진해 동부권 주민들은 그동안 지역 주민의 요구를 국가가 외면하자, 분노한 주민들이 「동부지역발전협의회」와 「진해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주민의 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와 같이 진해 동부권 주민들에게 항만 개발로 인한 피해만 강요하지 말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행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진해신항-진해-창원” 노선을 공약하여, 28년 동안 소외되어 실의에 빠져있던 진해 동부권 주민들은 대단히 기뻐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 주민의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은 항만 개발로 인해 생계 터전이 소멸된 어업 및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과 육상 및 해상의 물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기준치 초과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및 트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진해 동부권에 위치한 부산·진해신항이 국가 미래 발전 동력인 트라이포트(Tri-port: 항만, 철도, 항공)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세계적인 항구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명실공히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입지를 조기에 확보하기를 기원하며, 국가와 지역 주민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금년 9월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 변경 계획 안」 선정 시 진해 철도노선을 반영하라.

하나, 2026년 상반기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시 진해 동부권까지 노선이 연장되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하라.

하나, 진해 동부권의 항만배후도시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히 시행하라.

하나, 국가와 항만배후도시 주민의 상생발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항만을 개발하고 관리하라.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문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우리 사회의 활력을 이끄는 핵심 주체이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 연령 기준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 현실과 괴리된 기준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청년의 취업, 결혼 및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대수명 증가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해 과거와 달리 청년의 개념 자체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23년 5월 「청년기본조례」를 개정, 청년 연령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하였다. 이는 지역의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2023년 기준)로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높아졌으며, 청년 인구 역시 2020년 1,050만 명에서 2030년 86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청년 연령 기준을 더 이상 34세 이하로 고정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근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여전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조례나 개별 법령에서만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법적 기준이 사회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늦어진 사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청년들이 정책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간의 연령 기준 불일치로 인해 제각각인 청년 기준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같은 연령대임에도 거주 지역이나 적용 법령에 따라 정책 수혜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혼선은 청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도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5년 3월 발간한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청년 연령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연령기준 일원화보다는 최소한의 국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제는 '청년'이라는 정의를 더 이상 과거의 잣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제도는 청년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많은 청년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청년의 현실과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까지로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법령과 조례 간의 연령 기준 불일치로 인한 행정 혼선과 민원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국가 차원 청년 연령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 확대, 유전자 변형 작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이 미국의 요구사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국민 건강, 식량 안보, 농업 생존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는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다. 광우병 우려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다. 2008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추진으로 인해 전국적 시위가 벌어진 바 있고, 다시 이 기준을 완화한다면 국민 불신과 소비자 반발, 한우, 육우 등 축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쌀 수입 확대는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안보를 훼손한다. 쌀은 국내 자급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작물로, 다수 농가의 주된 소득원이기도 하다. 현재 적용 중인 513%의 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며, 이를 완화하거나 확대할 경우 국내 쌀값 폭락과 농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국가 식량주권 약화로 이어진다.

유전자 변형 작물(GMO) 수입 규제 완화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다. 유전자 변형 작물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국민의 먹거리 선택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현행 규제는 정당한 과학적·윤리적 기준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를 완화할 경우, 식품 안전성 훼손과 국민 불신 확산은 불가피하다.

미국산 과일류 검역 완화는 국내 과수농가의 생존을 위협한다. 사과, 블루베리, 체리, 딸기 등 미국산 과일류에 대한 검역 완화는 병해충 유입 위험 증가와 함께 저가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유통 질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과는 경북, 경남 등 주요 지역의 핵심 작목으로, 대량 수입 시 국내 생산 기반 전체가 위협받는다. 이는 농가만의 문제가 아닌 식량 주권과 소비자 안전 문제다.

정부는 농업의 공익성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단기적인 협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민 안전과 농업 기반 유지가 우선돼야 하며,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나 규제 완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적 공감 없이 추진되는 통상정책은 사회적 혼란과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국가 식량주권과 농업 기반을 지켜내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며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라.

하나,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단호히 배제하라.

하나, 농축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최우선 고려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라.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공원일몰제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문

창원시는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이미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 공원부지 보상 관련 지방채만으로도 1,590억 원에 이르며 이에 따른 이자액만 160억 원이다. 앞으로 미집행 공원면적 중 사유지만 하더라도 93만㎡에 1,100여억 원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지방채 원금도 1,200여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는 창원시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로, 지방정부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수준이다.

이는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시는 토지보상 예산이 당초 목표보다 2천억 원 넘게 증가했고, 서울시는 향후 6천억 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를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까지 총 7.3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규모의 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가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실효 대상인 공원 중 상당수가 정부가 1970년대 공원 지정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인력·재원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양한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도로, 철도 등 다른 도시계획 시설에는 국비를 지원하면서, 유독 도시공원에만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논리로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 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지방채 이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원금 부담은 여전히 지자체 몫이며,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가 책임지지 못하는 공원은 해제하라고만 한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특례사업 등 불가피한 방법을 모색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투명성 논란과 각종 부작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의 해결 방안으로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 그리고 법령상 더 이상 실효 유예 연장이 불가능한 2027년 6월이라는 최후의 시한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나서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다.

100만 창원 시민에게 도시공원은 여가, 문화, 휴식 공간으로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까지 아우르는 무한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지닌 공공재이다. 이러한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하여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공원 토지매입비를 직접 지원하라!

하나. 2023년까지 발행된 지방채의 이자액을 5년 동안 70% 국비 지원하는 것을 모든 지방채에 대하여 상환 완료 시까지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남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창원 시민은 물론 전국의 시민들이 소중한 녹색 공간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2025년 9월 1일

창 원 시 의 회

농어촌 숙련인력 감소 및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최근 우리나라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집중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 부족과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농어업의 지속성과 직결되는 숙련된 전문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경남지역에서만 1년 사이 약 4만 명의 숙련된 농어업 인력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지역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산업 균형 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여기에 더해,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폭우, 이상기후 등은 농어업 현장의 불확실성과 피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잦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수확과 어업 활동이 불안정해지고, 이는 숙련인력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농어촌 위기 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농어촌에 정착한 숙련인력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정주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숙련농어업인력 감소에 대한 정밀 조사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유입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착지원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라.

2025년 9월 1일

창 원 시 의 회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센터 설치 촉구 건의문

최근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생활지도 중인 50대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가 점심시간에 1학년 교실에 들어온 남학생에게 이유를 묻자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불가능한 교육 현장을 다시 한 번 목격했다.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이후이다.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보충 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이 핵심이었는데 현실적으로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이 조장되고 있다.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되다보니 교사와 학생 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학교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물론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학부모의 갑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부족으로 학교 폭력도 늘고 있는데 교육부의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였지만 교사들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공동성명을 통해 교권 보호 5법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광역 교육청뿐 아니라 모든 교육지원청에 센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의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며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에 교권 보호센터를 설치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긴급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환경과 학교 특성을 잘 알고 있어 지역별 교권 침해 유형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장기적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일부 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상담과 법률 지원을 외부 위탁에 의존하거나 법률 검토에만 수 주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교권보호센터에 교육활동 보호 담당 장학관·장학사, 파견교사, 법률 전문가 등의 인원 확충 및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 교육, 갈등·조정 회복 프로그램 등의 도입과 국가 차원의 표준 지침 마련,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격차 해소 등도 필요하다.

이에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회복을 통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요청한다.

하나, 지역별 특성에 맞고 실효성 있는 교원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직무별 인원 충원과 상시 배치를 통해 내실있는 교권보호센터 운영을 담보하라!

하나, 교권보호센터의 각종 교육, 상담, 긴급 지원 프로그램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국가 차원의 표준 지침 마련과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라!

2025년 9월 12일

창 원 시 의 회

낙동강 하류지역 창원시 수돗물 원수 요금 감면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의 물 관리 정책에는 근본적 모순이 존재한다. 낙동강 수계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창원시는 심각한 수질 악화로 고비용의 정수처리를 거쳐야 함에도, 전국 단일요금제로 1급수 지역과 동일한 원수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여기에 수질개선 부담금과 추가 정수처리 비용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구조적 불합리가 지속되고 있다.

낙동강의 현실은 냉혹하다. 각고의 노력 끝에 3~4급수에서 겨우 2급수까지 끌어올렸음에도, 2024년에만 총 167일, 1년의 45.7%라는 긴 기간 동안 조류경보가 발령되었다. 반면 수도권 지자체들은 애초부터 한강 1급수라는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겨우 2급수에 머물며 하루건너 한 번꼴로 조류경보에 시달리는 지역과 1급수인 지역이 같은 값을 치르고 있어, 수질은 나쁜데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온다. 이런 구조적 불평등은 반드시 해소되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원수 구입으로 83억 원을 지출하는데, 수질 개선 명목의 물이용부담금 151억 원을 징수당하고 정수처리 비용 24억 2천만 원을 추가 부담한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은 8억 9천만 원에 불과하다. 더욱 불합리한 것은 같은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광역시가 수질연동요금특례로 물이용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이 특례는 BOD(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3mg/L 초과 시 부과율을 70~50%까지 감면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같은 수질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변화의 근거는 이미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에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생긴 셈이다. 수질이 천양지차인 원수에 획일적 요금을 적용하는 현행 구조야말로 이 논리에 따라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부 및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원수 수질 기반 차등요금제를 즉시 도입하라.

조류경보 발령 일수와 BOD, TOC(총유기탄소) 등 객관적 수질지표에 연동한 원수 요금 차등 부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2024년 기준 연간 167일의 조류경보가 발령되는 수역과 1급수 청정 지역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둘째, 물이용부담금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라.

현행 지원 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조류경보 단계별 차등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151억 원의 부담금을 징수하면서도 8억 9천만 원에 불과한 지원금으로는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담금 대비 지원금 비율의 현실적 조정이 시급하다.

셋째, 창원시에 부산시와 동등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특례를 적용하라.

같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수질 피해가 유사함에도 지자체별로 차별적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의 기본이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물 복지 실현 의무를 지지만, 그 토대가 되는 공정한 물 관리 구조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낙동강 수계 지자체들이 감내하고 있는 과도한 '물값' 부담은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근본 문제다. 수질에 기반한 원수 요금 조정과 물이용부담금 차등 지원 제도화를 조속히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9월 12일

창 원 시 의 회

국립남부청소년 수련원의 창원시 건립 촉구 건의문

창원특례시는 경남의 수부도시이자 동남권 핵심 거점 도시로, 경남 전체 청소년 인구의 31%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창원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전무하며, 청소년수련시설 9개소가 운영 중이나 대부분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로 안전과 편의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들의 이용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에서 제시한 핵심과제인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기에도 역부족이다.

□ 전국 1~4위 청소년(9~24세) 인구현황(‘25.7월, 주민등록인구통계)

(단위:명)

| 경기도(1위) | | 서울(2위) | | 경남(3위) | | 부산(4위) | |
|------------|-----------|-----------|-----------|-----------|---------|-----------|---------|
| 총인구 | 청소년인구 | 총인구 | 청소년인구 | 총인구 | 청소년인구 | 총인구 | 청소년인구 |
| 13,715,016 | 2,139,156 | 9,323,492 | 1,297,527 | 3,214,016 | 478,737 | 3,251,625 | 445,527 |

※ 창원인구/ 청소년인구(‘25.7월) : 994,283명/148,524명, 경남전체 청소년인구의 31%임.

청소년기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진로 탐색이 필수적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뿐 아니라 비행 예방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핵심 인프라다. 따라서 창원에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 확충을 넘어, 청소년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책무라 할 수 있다.

특히 창원에는 로봇·우주항공·방산·에너지·스마트제조 등 첨단 산업이 집적된 도시로, 수련원을 이러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미래직업체험형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경남 전역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도시와 자연이 밀접하게 공존하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청소년들에게 첨단 산업 체험과 더불어 자연친화적 활동까지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은 연수, 청소년캠프, 전국 규모 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타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 방문이 늘어나면서 창원특례시의 브랜드 가치 또한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는 단순한 청소년 시설 건립을 넘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연번 | 지 역 | 시설명 | 생 활 관 수용인원 | 주 요 내 용 | 준공월 |
|----|--------------------|-----------------------|---------------|--|---------|
| 1 | 부산시 (사하) | 국립을숙도청소년 생태안전체험수련원 | 162명 | • 낙동강과 하구언, 을숙도 갯벌 등을 활용한 습지관찰, 탐조 활동 등 | '23.06. |
| 2 | 전북도 (김제) |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 | 388명 | • 생명과학, 농업기술, 생태환경, 농업문화, 융합진로 체험활동 운영 | '13.04. |
| 3 | 전남도 (고흥) |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 214명 | • 우주인 훈련체험 활동관, 로켓 발사장, 천체투영관 등 운영 | '01.07. |
| 4 | 경북도 (영덕, 봉화) | 국립청소년 해양센터 | 292명 | • 극지실험실, 선박항해 시뮬레이션, 수중로봇 체험장비 등 운영 | '13.07. |
| 5 | |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 | 162명 |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육상 생태보존 프로그램 운영 등 | '22.07. |

현재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부산, 전남, 전북, 경북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청소년 인구가 전국 3위인 경남에는 단 한 곳도 없다. 따라서 청소년 인구의 31%가 몰려 있는 창원특례시에 국립남부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은 지역적 형평성과 정책적 필요성 모두를 충족하는 필수 과제이다.

이에,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창원시의회는 청소년들의 미래직업에 대한 체험과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시민 여가공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을 경남 전체 청소년 인구의 31%를 차지하는 창원특례시에 건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5년 9월 12일
창 원 시 의 회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창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창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창원시민의 33년이 넘는 간절한 염원이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국회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의과대학 미설치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밝힌 의대 신설 대상 지역은 인천, 전북, 전남, 경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경남 지역은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보건의료 향상이라는 국정철학에 반하는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는 경남 최대 도시이자, 경남 전체 인구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추 도시임에도, 비수도권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도시로 남아 있으며, 의료인력 자립 기반과 공공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연간 23만 명에 달하는 창원시민들은 매일 수도권과 타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진료비 외에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막대한 직·간접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추가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자 지역경제의 손실이며 시민 복지의 심각한 후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다”고 공약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균형 잡힌 정책 실천 없이 단순 구호에만 머무른다면 창원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의 오랜 염원을 다시 한 번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창원시에 의과대학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창원시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하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

2025년 9월 12일

창 원 시 의 회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및 특례시 권한 확대 촉구 건의문

정부와 국회는 대도시의 복합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자치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중간 단계 자치형태의 특례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창원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특례시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수원·용인·고양·화성과 함께 전국 5개 특례시 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창원을 제외한 4개 도시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제도 운영의 균형성과 다양성,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지역 대표성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실질적 자치역량과 복합행정 수요를 갖춘 도시라면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인구 기준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는 다수의 비수도권 중추 도시들의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고, 비수도권 특례시는 특례시 지정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특례시 권한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서라도 비수도권 특례시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특례 권한이 제도화되고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현실에 기반한 행정 실험과 정책 축적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도권 중심의 도시만으로는 권한 이양의 보편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비수도권 대표 특례시가 존재해야만 제도 전체의 외연이 확대되고,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정부와 함께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용인·고양·화성특례시의회에도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인구 기준 외에도 하향화와 함께 행정 수요, 광역기능 수행 여부, 도청 소재 여부, 산업 기반, 생활권 중심성 등을 반영한 복합지표 기반의 특례시 지정 및 유지 체계를 마련하고, 권역별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특례시 지정 및 유지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계 부처와 특례시 간의 정례 협의체계를 제도화하라. 또한, 조직권·재정권·도시계획 결정권·자치입법권 등 광역시급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고, 권한 이양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이행하라.

하나. 5개 특례시의회는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특례시 지정 및 유지 필요성에 대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비수도권 특례시 존재가 특례 권한 확보와 제도 완성의 발판임을 함께 인식하며 연대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2025년 9월 12일

창 원 시 의 회

여성농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의 농어촌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농어업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경영주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여성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어촌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경영주 등록을 주 경작자에게만 인정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을 대부분 배우자 자격의 공동경영주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농어업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겸업에 나설 경우 공동경영주 지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불금 등 각종 정책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농어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24년 농가경제조사 및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농업 소득은 농가소득의 19%에 불과하며, 어업소득 역시 전체 어가소득의 4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농외소득은 40%, 어업외 소득은 2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어업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재해와 계절적 휴업까지 겹쳐 대부분의 농어업인이 겸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도는 남성 경영주가 겸업을 하더라도 경영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동 경영주인 여성농어업인은 겸업이나 일용직 종사,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등의 사유만으로 지위를 잃게 만든다. 이는 명백한 제도적 불평등이며 여성농어업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차별이다.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경영에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육아·지역사회 활동까지 떠맡아 다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공동경영주의 법적 지위를 불분명하게 두어 여성농어업인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은 반드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공동경영주는 당연히 경영주와 동등한 지위와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업 발전의 동반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농·어업경영체 등록 제도에서 공동경영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주와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공동경영주가 생계를 위해 겸업을 하더라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업 소득의 불안정성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등록 요건을 완화하라.

하나. 공동경영주 등록 요건에서 모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농어업 경영 참여도를 기준으로 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라.

2025년 9월 12일

창 원 시 의 회

진해신항 항계선 경남 관할 확보를 위한 촉구 결의문

경상남도과 창원시는 국가 물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그동안 항만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2027년 개항 예정인 진해신항은 대한민국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도약할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진해신항 항계선 조정 과정에서 부산 관할로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현실이 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조정을 넘어 경남 항만산업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역경제 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될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진해신항 항계선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며, 경남 항만의 독립성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진해신항 항계선을 반드시 경남 관할로 재확정하여 부산 관할 편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라.

하나. 진해신항은 마산항·진해항과 연계된 경남 항만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산항의 보조 항만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독립적 위상을 보장하라.

하나. 경남 항만산업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는 책임 있는 항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라.

2025년 9월 12일

창 원 시 의 회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역할 강화 촉구 건의문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국비 17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60억원, 민간 780억원 총 1,050억원 규모의 국가 공모사업이다. 민간 780억원 중 710억원은 PF방식으로 대주단에서 조달하였으나 준공 지연, 수요처 미확보 등으로 PF 대출이자 납부 지연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대주단에서 디폴트가 선언되었다. 결국 운영 주체인 (주)하이창원이 대주단 관리 체제로 넘어가며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정적인 수요처 부재이다. 해당 플랜트는 하루 5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나 저장용량은 15톤에 불과하여 최대 3일치 생산분만 보관 가능하여 사실상 장기 저장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고정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하루 8,400만 원 연간 최대 약 300억 원에 달하는 액화수소 구매대금을 대주단에 지급해야 하지만, 이는 창원산업진흥원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창원시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대주단은 가압류 조치를 실행에 옮길 경우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불가능한 수준의 재정 압박”으로 귀착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창원시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첫째, 국비 교부 이후 후속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본 사업은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모 선정 이후 사업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거나 성과를 관리하는 제도가 사실상 부재하다. 그러므로 사업 공모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소 수요처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수소는 초기 인프라 단계에서 정부가 직접 수요를 창출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민간 시장에서 자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발전사, 운송 분야, 수소 전문 기업 등과 연계하여 정부 차원에서 수요처를 매칭하거나 의무사용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수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민간 대기업의 참여와 매각 방안이 제도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현재 SK, 효성 등 주요 대기업들이 액화수소 관련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만큼,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또한 독자적 운영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대기업 지분 참여나 매각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공모사업 관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소 산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전략 산업이지만, 현재와 같이 국가 공모사업 후 지원 체계가 요원한 방식으로는 수소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앞선 네 가지 방안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국가 수소 산업 전반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9월 12일

창 원 시 의 회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결의문

지난 9월 3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올해 안에 전국 15개 홈플러스 매장을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다수의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 해지 통보에 이어, 추가적인 대규모 매각 및 폐점 가능성이 가시화 된 것이다.

홈플러스는 단순한 대형마트가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 입점 소상공인, 납품업체, 지역 농축수산업 생산자들의 생계를 지탱하는 대형 유통시설이다. 대형 유통시설의 철수는 지역 고용 기반의 붕괴와 상권 공동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온다.

창원시 관내에 위치한 홈플러스 3곳은 이번 폐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여전히 지역사회와 종사자들은 불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폐점으로 도심 공동화와 주민 생활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창원시의 경우 최근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폐점으로 지역 상권과 고용 기반 위축을 목격한 바 있다.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로서 지역사회의 고용과 생계를 지탱하는 유통시설을 책임지고 운영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수많은 노동자와 입점 상인, 지역 경제 주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는 기업의 책임을 외면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MBK 파트너스는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업 회생 노력에 나서야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폐점과 그로 인한 지역 상권의 붕괴, 고용위기는 결코 특정 기업의 문제에 국한될 수 없으며, MBK 파트너스는 물론 정부와 국회 모두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역경제의 지속성과 시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MBK 파트너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자구노력을 통해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이행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입점 상인·종사자·납품업체 등의 피해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고용 안정 및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대형 유통시설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입점 상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5년 9월 12일

창 원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해련)는 의회사무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8월19일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해련)는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 일정을 9.1.~ 9.12.(12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해련)는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을 예비심사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선애)는 소관부서의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및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9월 1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봉곡민속체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등 2개소를 방문하여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선애)는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청취했으며 △「창원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소관부서의「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복지위원회는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을 예비심사했으며 소관부서의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7월 23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는 대상공원 내 '맘스프리존'을 시작으로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소리단길 코워킹 스페이스를 방문해 육아·창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내실 있는 시설 운영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을 예비 심사하고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6건을 보고받았으며,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순욱)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순욱)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전홍표)는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7월 22일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전홍표)는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 현장, 자족형복합행정타운, 구항뽕프장, 광암해수욕장을 현장방문하여,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전홍표)는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보고 등 2건의 보고를 받았다. 또한,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현)는 9월 11일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제예산안"을 종합심사했다.



구 점 득 의원 (팔릉동, 의창동)

- 1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2 관광정책개발연구회 현장 최종보고회
- 3 25.11.27 문화환경도시위원회
- 4 창원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 포럼
- 5 한국전자기술원 방문





권 성 현 의원 (동읍, 대산면, 북면)

- 1 제1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 북면 기초질서 봉사활동 참석
- 3 25.11.20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분과회의
- 4 의료바이오·수소에너지 신성장 산업 점검
- 5 수출용 단감 선별장 현장 방문





김 남 수 의원 (봉림동, 명곡동)

- 1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 창원한들초등학교 행복나눔 한마당
- 3 25.11.27 문화환경도시위원회
- 4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 대잔치
- 5 사람동 두레지역아동센터 사랑의 물품 후원 전달식





김묘정 의원 (팔룡동, 의창동)

- 1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 산불재해 현장 봉사활동
- 3 제1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원 보고대회
- 5 MBC경남, 남두용의 좋은아침 인터뷰





김 우 진 의원 (동읍,대산면, 북면)

- 1** 제147회 제1차 본회의
- 2** 삼봉공원 가로등 및 벤치수리 민원 현장 점검
- 3** 동읍 자여마을 환경정화 봉사활동
- 4** 대산초 등,하곶길 횡단보도 및 육교 현장 점검
- 5** 25.10.22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혜란 의원 (팔룡동, 의창동)

- 1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 가로수 꽃잔디 화단조성 봉사활동
- 3 3.23 창원읍민독립만세의거 재현행사
- 4 동진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 5 25.11.10 의회운영위원회





안 상 우 의원 (봉림동, 명곡동)

- 1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2 경남도지사와 함께하는 경남청년 간담회
- 3 봉림동 주민 총회
- 4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인사
- 5 25.9.2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최 은 하 의원 (동읍, 대산면, 북면)

- 1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 북면 천주산 산불 예방활동
- 3 의창구 대산면 벼 병충해 방제 현장
- 4 동읍 어르신 한마당 축제 현장
- 5 25.11.10 의회운영위원회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2025년 학술연구용역 결과 도출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성보빈)는 7월 25일 민생조례 연구용역결과 최종보고회와 함께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여 지난 6월 시민이 제안한 여러 조례 중 시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조례안을 선정하고 제안한 시민 다섯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선정된 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조례안', '공영자전거 이용 촉진 등 조례안' 등 5건이다. 이 날 같이 진행된 연구용역결과 최종보고회에서는 관계 부서가 함께 참석하여 선정된 조례안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소속 의원들은 담당부서에 적극적인 조례 제·개정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연구회는 같은 달 31일 의원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입법역량 강화를 목표로 현행 창원시 조례를 토대로 주의해야 하거나 개선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업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미래전략산업연구회(대표의원 오은옥)는 7월 28일 창원시가 미래형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 구조와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지역의 산업 기반과 정책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이날 '미래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수행의 일환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컨퍼런스를 마련했다. 컨퍼런스는 제조업 인프라와 디지털·인공지능 기술 결합 사례,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통한 청년 유입 방안 제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시급성 및 스타트업 디지털 전환 육성·지원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산업 육성 및 인재 유입을 위해 창원시가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을 소개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대표의원 서명일)는 7월 24일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와 교류간담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2021년부터 수행한 연구과제와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올해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방안 연구’의 계획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여수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연구회는 연구 계획 가운데 플랫폼 마련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 이후 창원천으로 이동해 현장답사를 함께하며 지역주민의 쉼터이자 희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로 회복된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에 대해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향후 두 의회의 활발한 소통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창원특례시도시리브랜딩연구회(대표의원 김영록)는 9월 10일 ‘창원특례시의 도시 비전 맞춤형 리브랜딩 연구’최종보고회를 열고, 창원시 리브랜딩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창원시의 브랜드가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정체성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민참여형 리브랜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스포츠 분야와의 협업과 생애주기 관점을 접목해 시민의 생활 전반에 스며드는 도시 브랜드를 구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 참석자들은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창원시 리브랜딩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향후 로드맵과 실효성 있는 구체적 대안을 포함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며 파편화된 창원 브랜드를 통합하고 시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브랜드를 만드는데 의견을 모으며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했다.



관광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김혜란)는 9월 30일 돌섬 안점 점검 및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마산권 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확인 및 연구 용역 결과 보고를 위해 마산 돌섬에서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창원권·마산권·진해권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여 웅천도요지 관광 콘텐츠 개발, 북면 온천 스포츠 연계 방안 등 숨은 관광자원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조사·논의를 진행해 왔다. 의원들은 이날 보고회에서 타 지역 사례를 토대로 권역별 관광지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며 단기적으로 기존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고 실효성 있는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며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했다.



도시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경수)는 9월 29일 '창원시 뉴빌리지형 단독주택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 4월 착수보고회 이후 일곱 차례의 시민 인터뷰를 통해 단독주택지 개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관련 국내외 사례를 조사했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단독주택지 기반 시설이 낙후돼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도로·주차 등 인프라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보고회에는 인터뷰에 응했던 창원 시민 5명이 직접 참석해 단독주택 주거 환경의 불편함을 공유했다. 또 창원시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관계자가 참석해 경청했다. 연구회는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독주택지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에 공감하며 보고회를 종료했다.



● 2025. 7. 1. 제15회 창원시민의날 기념식



● 2025. 7. 7. 구내식당 개소식



● 2025. 7. 9. 경사형 승강기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 토론회

● 2025. 7. 9. 창원시정연구원 개원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2025. 7. 12. 한청 청소년문화 페스티벌



● 2025. 7. 16.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 (65)



● 2025-07-16 팔용로 교통안전시설물 횡단보도 운영 개통식



● 2025. 7. 17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25. 7. 24.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의장협의회
(수원시)



● 2025. 7. 24.
제13회 창원시 사회복지사 대회



● 2025. 7. 24.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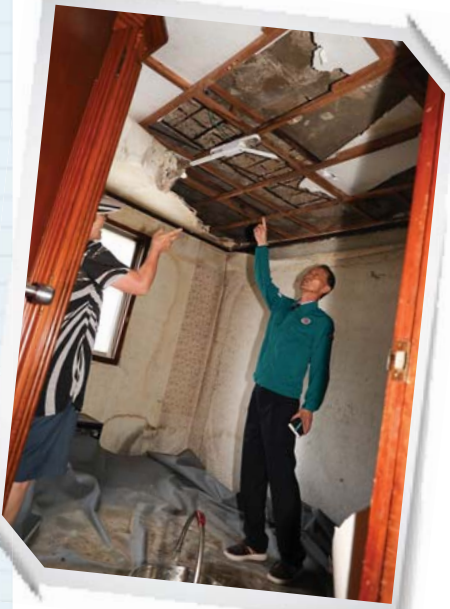
● 2025. 7. 25. 경남 수해지역 성금기탁식



● 2025. 7. 25. 창원시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 2025. 7. 25. 창원시의원 및 직원을 위한 맞춤형 법제교육



● 2025. 8. 7.
봉암연립주택 현장 방문



● 2025. 8. 10. 제12회 창원특례시장기 궁도대회



● 2025. 8. 10. 의장단 간담회



● 2025. 8. 10. 의장단 을지연습장 격려 방문



● 2025. 9. 3.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 2025. 9. 3. 제29회 노인의날 기념식 및 경남실버체육대회



● 2025. 9. 3. 생활정치 일수한마당



● 2025. 9. 7. '제14회 창원특례시장기 배드민턴대회' 개최식



● 2025. 9. 12. 오동동 아맥축제



● 2025. 9. 19. 창원복지 들썩들썩 talk



● 2025 . 9. 15. 창원향교 추기석전



● 2025 . 9. 29. 추석맞이 복지시설 방문(마산합포구 영신원)



● 2025 . 9. 30.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다짐대회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실천적 전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우진 의원 (동읍, 대산·북면)

고령화, 인구 감소, 청년 이탈. 지금의 농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식량 안보, 생태계 보존, 균형 발전이 달린 중대한 과제다. 농촌 활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첫째, 청년의 유입이 핵심이다. 도시의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귀농 지원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스마트팜 교육, 농업 스타트업 육성, 주거 인프라 제공 등 종합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농촌은 단순 노동의 공간이 아니다. 첨단 기술과 결합한 혁신의 무대가 될 수 있다.

둘째,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 농업은 단지 식량 생산만이 아니다. 환경 보전, 문화유산, 생태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유기농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업 확산은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하며, 농촌 체험 관광은 도시민과 농촌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다층적 가치를 정책과 시장에 정당히 반영해야 한다.

셋째, 주민 참여형 지역 개발이 중요하다.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이어야 지속 가능하다. 로컬푸드 운동, 협동조합형 농장, 마을 기업 등은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좋은 사례다. 행정은 이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촉진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넷째, 디지털 인프라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원격 근무와 비대면 시대에는 농촌도 충분히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터넷 접속조차 어려운 곳이 아직 많다. 광대역망 보급, 디지털 교육, 온라인 판로 개척이 함께 이뤄져야 농촌도 시대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다.

농촌 활성화는 일시적 붐이 아니다. 인구와 자본을 잠시 끌어오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 지속 가능한 생활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재설계하고, 그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공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한계를 메우고 가능성을 확장하는 상생의 길, 이제 시작해야 한다.



기초의원의 역할과 책임- 주민을 위한 진정한 대변자가 되어야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현** 의원 (충무 · 여좌 · 태백동)

기초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기초의원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초의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은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초의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에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특히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의원의 또 다른 핵심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다. 특히 주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의원의 중요한 책무다.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초의원의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주민들이

행정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다.

기초의원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복지 정책 제언,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며 발전시키는 일도 기초의원의 중요한 역할이다.

기초의원의 역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정치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복지와 주민을 위한 자리라는 점이다. 기초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명예보다는 오직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화려한 구호나 정치적 수사보다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의원의 역할이다.

결국 기초의원은 주민들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분산형 연료전지 사업, 개선 필요하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의원 (중앙·웅남동)

창원종합운동장 뒤편 산책로를 걷다 보면 나무 울타리로 가려진 시설을 보게 된다. 해당 시설은 창원누리에너지발전소 CN-3 발전소로 올해 운전을 시작했다.

창원시는 '수소산업 비전 2040'을 선포하고, 2040년까지 연료전지 발전 자족용량 1200MW를 확보하겠다는 목표 아래 도심 곳곳에서 연료전지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이 '창원시 도심분산형 연료전지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 SK에코플랜트 등으로 구성된 창원그린에너지가 시의 유휴부지에 1320억 원을 투자해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부지는 중앙동을 포함한 7곳이며, 이는 수소 기반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앞서 언급한 CN-3는 바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진 발전소다.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에 발맞추어 시작된 이 사업은 고효율, 저소음, 친환경성 등의 장점을 내세우며 추진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시민 소통의 부재라는 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 해당 시설이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는 비단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넘어서,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시민 신뢰의 문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상 발전설비가 3MW를 초과하지 않으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의무는

없지만, 법적 최소기준만을 따르는 방식으로는 공공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더구나 중앙동의 경우에는 불과 100~200m 간격으로 두 개의 발전시설이 마주 보고 있으며, 인근에는 주택가는 물론 곧 입주를 앞둔 대규모 아파트와 개장을 앞둔 대상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대상공원은 향후 많은 시민이 찾게 될 도심 속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처럼 유동 인구가 높은 장소에 어떤 안내 표지 하나 없이 발전시설이 조성된 현실은 심각한 행정 미비를 보여준다.

일부 시민들은 발전기음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위험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수소 기반 설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이다.

수소연료전지는 미래산업이며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공감이나 의견이 배제된 정책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창원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결국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행정기관 주도의 사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시는 각 발전소 거점마다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시설의 용도와 안전성,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이 신뢰하고 동참하는 '지속 가능한 수소 도시 창원'의 미래도 가능해질 것이다.



인구소멸 대응, 이제는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필요하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의원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 온 단순한 인구 늘리기 정책, 즉 출산 장려와 전입 유치 중심의 수치 경쟁은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해법이 바로 '생활인구 정책'이다. 생활인구란 단순히 주민 등록상 주소지 인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출퇴근, 통학, 관광, 업무 등 다양한 이유로 이동하거나 체류하며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즉 지역과의 다양한 관계 맺음을 기반으로 경제활동, 소비, 사회활동 등 여러 분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폭넓게 포괄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구 통계와는 다른 개념이다.

실제로 생활인구는 교통 요지, 관광지, 혹은 산업 단지 인근 등 일시적 유입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 공식 인구 외에도 많은 사람이 지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은 인구의 양적 확대 보다 질적 전환, 즉 지역에 머무르고 실제로 기여하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망 개선, 단기 거주 지원, 소상공인 중심 상권 활성화, 창업 공간 제공 등이 생활 인구를 늘리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된다.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위케이션, 은퇴자 마을, 청년 복합공간 조성 등도 필요하다. 일본은 이미 '관계 인구 창출 확대 사업'을 통해 외부인이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마네현의 '시마코토 아카데미'는 외부인이 반복적으로 방문하며 지역에 기여하게 했고, '고향납세 제도'는 도시민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향올래' 사업, 로컬 유학, 농가체험형 숙박 등 다양한 실험적 정책이 시행 중이다. 지역 사례로 경남 창원시의 구산면, 진동, 진전 일대와 같은 해안지역은 세계적 수준의 자연경관과 국도, 도심 접근성을 활용하면 포지타노 같은 해양문화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예술가, 건축가, 상인이 연합한 해양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관광, 휴양, 레저 등 다양한 체류형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 인구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행정기관별로 생활 인구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통계 기준도 일관되지 않아, 정책 평가 및 효과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통계청, 통신사, 교통 카드, 지역화폐 등을 연계해 생활인구를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구 정책의 관점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으로 변화해야 가능한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머무는 실제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얼마나 풍요롭고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이다. 생활인구 중심의 전략이 각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전환이 절실하다.



마산해양신도시, 광장으로 미래를 열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의원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20년 가까이 표류해 왔다. 오랜 지연과 우여곡절 속에서도 시민이 손꼽아 기다려온 것은 다름 아닌 중앙광장이다. 길이 608m, 폭 50m 규모로 계획된 이 광장은 도시의 심장부이자 정체성을 담은 무대다.

그러나 창원시는 최근 이 광장을 '상부 개발과의 부조화 우려'라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했다. 이미 반영된 49억 원의 예산은 정산 처리하고, 특별 회계에서 추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시민 공간을 민간 개발 일정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광장은 건물이 완성된 뒤에 꾸며지는 부속물이 아니다. 오히려 도시의 방향을 먼저 이끄는 공간이다. 서울광장은 1만 3000㎡ 규모지만, 매년 축제와 집회, 문화행사로 '시민의 거실' 역할을 한다. 광화문광장은 3만 4000㎡에 달하며, 국가적 기념식과 대규모 집회의 상징적 무대가 되었다. 마산해양신도시 중앙광장은 약 3만 800㎡ 규모로, 창원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시민의 자부심을 세울 핵심 동력이 될 곳이다.

광장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마산해양신도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이다. 개발 계획에도 '도시 테마와 특성을 반영한 특화 시설'로 명시돼 있는 만큼, 민간 개발 일정에 맞춰 미루는 것은 공공성을 외면하는 처사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시민을 모으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주변 상업·문화시설을 활성화한다. 공원이 쉽

다면, 광장은 무대다. 신도시의 활력을 만드는 힘은 광장에서 나온다.

마산은 한때 인구 50만 명을 넘어서며 경남의 대표 도시로 우뚝 섰지만, 지금은 기업과 사람이 떠나 상권이 급격히 쇠락했다. 최근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폐점은 그 침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현실에서 필자는 마산권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구산해양관광단지와 해양신도시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간 개발 논리보다 시민 공공성이다. 상업 지역 비율은 오락가락하며 늘리면서 시민이 누릴 공간은 뒤로 미루는 것은 모순이다. 이미 반영된 예산이 있다면 정산이 아닌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광장을 먼저 열어야 시민이 해양신도시를 체감하고, 전체 사업도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광장이 살아야 해양신도시가 산다. 광장이 활성화 되어야 해양신도시가 살아나고, 옛 마산 산업화와 예술인의 요람이던 7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창원 마산합포구 원도심도 변화와 발전의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해양신도시 내 중앙광장은 하루빨리 개장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창원특례시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을 필자는 호소한다.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정착, 창원시와 함께

기획행정위원회 **김이근** 의원 (구산·진동·진북·진전면, 현동, 가포동)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는 새로운 대안으로 외국인 주민의 유입과 정착 지원이 주목받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국제적 산업도시로, 수년간 외국인 주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지역사회 융합과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자체 중에서는 이미 충북 제천시, 광주광역시, 안산시 등에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창원 특례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그룹이 지역 내 산업과 학교, 그리고 우리 생활 공동체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고려인과 재외동포 주민들은 단순 노동력 공급자를 넘어 지역경제, 문화,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창원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중요한 주체라 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은 인구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 실현 국제 교류 증진·사회 통합 등 대도시인 창원특례시의 경쟁력 제고와도 직결된다.

차세대 이주민의 정체성 함양과 미래 세대 육성 역시 지역 포용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토대가 된다. 이에 창원특례시도 관련 조례 제정과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창원특례시는 외국인주민팀을 신설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여러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인 주민 및 기타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어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태조사와 통계 구축, 지원사업의 유형별 분류 및 예산 편성 근거 마련, 행정 서비스 매뉴얼화와 담당 부서의 책임 강화, 지역 주민과 이해 관계자 간 소통 확대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수적이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한국어 교육·취업 연계·의료비 지원·법률 상담 등 복합적 정책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창원특례시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편적 인권 신장 등 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재외동포 정착 지원이 정부의 주요 과제를 감안할 때, 창원시는 조속히 종합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제 창원특례시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창원의 도시 브랜드와 인구 정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 사회 실현의 주인공이 되어주길 제안한다.

2026 회기 운영일정(안)

| 월별 | 회기별 | 회 기 | | 주요 처리 안건 |
|----------------------------|-------|---------------------|----|---|
| 계 | | 8회 110일 | | (정례회 50일, 임시회 60일) |
| 임 시 회 | 제149회 | 1.20.(화)~1.29.(목) | 10 |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 | 제150회 | 3.5.(목)~3.18.(수) | 14 | • 행정사무감사 사전 준비(시기, 계획)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시정 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 | 제151회 | 4.21.(화)~4.30.(목) | 10 |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 | 제152회 | 7.1.(수)~7.2.(목) | 2 | • 의장단 선거(7.1.) • 상임위원회 구성(7.2.) |
| | 제153회 | 7.16.(목)~7.27.(일) | 12 | •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 제 1 차 정 례 회 | 제154회 | 9.1.(화)~9.23.(수) | 23 | • 행정사무감사 • 202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승인 • 시정 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 임 시 회 | 제155회 | 10.19.(월)~10.30.(금) | 12 |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 제 2 차 정 례 회 | 제156회 | 11.25.(수)~12.21.(월) | 27 | •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 202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시정 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 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시민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활짝 열려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입니다.



방청안내

방청안내

일반신청(개인)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방청절차

① 방청신청 → ② 방청허가 → ③ 방청권 교부 → ④ 방청

문의

의회사무국 : 055)225-5311



창원특례시의회

<https://council.changwon.go.kr>

지금 이 순간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의회 이야기를
의회소식지에서 만나보세요.





지도로 보는 우리동네 의원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현황(45명)

• 지역구 의원 40명, 비례대표 의원 5명

카) 내서읍



이 우 완



남 재 욱



황 점 복



서 명 일

타) 회원1·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

파)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

아)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김 이 근



이 천 수



손 태 화



문 순 규



박 승 엽

자)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서 영 권



홍 용 채



이 원 주

차)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박 선 애



정 길 상



전 흥 표

비례대표



박 강 우



김 미 나



김 수 혜



오 은 옥



진 형 익



가) 동읍, 대산면, 북면



권 성 현



최 은 하



김 우 진

나) 팔룡동, 의창동



구 점 득



김 혜 란



김 묘 정

다) 봉림동, 명곡동



김 남 수



안 상 우

라) 반송동, 용지동



강 창 석



박 해 정

마) 종양동, 웅남동



김 경 희



이 정 희

바) 상남동, 사파동



한 은 정



김 경 수



성 보 빈

하) 총무동, 여좌동, 태백동



이 해 련



김 상 현

거) 경화동, 병암동, 석동



김 현 일



정 순 욱

사) 가음정동, 성주동



백 승 규



김 영 록

너)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이 중 화



최 정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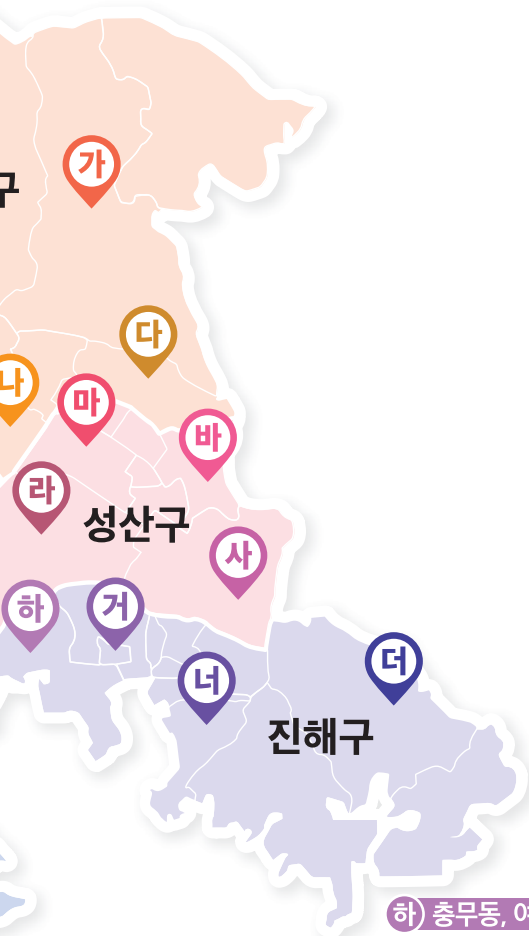
더) 웅천동, 웅동1·2동



심 영 석



한 상 석



의 장 단



의장
손 태 화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



부의장
권 성 현

(동읍, 대산면, 북면)



의회운영위원장
이 해 련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기획행정위원장
박 선 애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산업경제복지위원장
최 정 훈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문화환경도시위원장
정 순 욱

(경화동, 병암동, 석동)



건설해양농림위원장
전 홍 표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의 장

손 태 화 국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

부 의 장

권 성 현 국

동읍, 대산면, 북면

국 국민의힘 더 더불어민주당

| 위 원 회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 | 산업경제복지위원회 | 문화환경도시위원회 | 건설해양농림위원회 |
|-------|--|--|--|--|--|
| 위 원 장 | 이 해 련 국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 박 선 애 국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 최 정 훈 국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 정 순 욱 더 경화동, 병암동, 석동 | 전 홍 표 더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
| 부위원장 | 홍 용 채 국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 김 영 록 국 가음정동, 성주동 | 이 우 완 더 내서읍 | 강 창 석 국 반송동, 용지동 | 서 영 권 국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
| 위 원 | 이 우 완 더 내서읍 | 김 헌 일 국 경화동, 병암동, 석동 | 이 종 화 더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 한 은 정 더 상남동, 사파동 | 백 승 규 더 가음정동, 성주동 |
| | 최 은 하 더 동읍, 대산면, 북면 | 이 해 련 국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 권 성 현 국 동읍, 대산면, 북면 | 정 길 상 국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 심 영 석 더 웅천동, 웅동1·2동 |
| | 남 재 욱 국 내서읍 | 김 이 근 국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 김 경 희 더 중앙동, 웅남동 | 김 경 수 국 상남동, 사파동 | 최 은 하 더 동읍, 대산면, 북면 |
| | 서 영 권 국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 이 천 수 국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 홍 용 채 국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 구 점 득 국 팔룡동, 의창동 | 한 상 석 국 웅천동, 웅동1·2동 |
| | 박 해 정 더 반송동, 용지동 | 문 순 규 더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 | 이 정 희 국 중앙동, 웅남동 | 박 해 정 더 반송동, 용지동 | 황 점 복 국 회원1·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 |
| | 김 해 란 국 팔룡동, 의창동 | 김 상 현 더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 서 명 일 더 회원1·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 | 김 남 수 더 봉림동, 명곡동 | 김 우 진 국 동읍, 대산면, 북면 |
| | | 남 재 욱 국 내서읍 | 성 보 빈 국 상남동, 사파동 | 김 해 란 국 팔룡동, 의창동 | 안 상 우 국 봉림동, 명곡동 |
| | | 김 묘 정 더 팔룡동, 의창동 | 오 은 욱 더 비례대표 | 박 승 업 국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 | 박 강 우 국 비례대표 |
| | | 진 형 익 더 비례대표 | 김 수 혜 국 비례대표 | 이 원 주 더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 김 미 나 국 비례대표 |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145회 임시회 (2025. 7. 17. ~7. 25.) 9일간 총 18건

의결목록

| | |
|--|------|
| •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 원안가결 |
| •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마산합포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 2035 창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
| •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 원안가결 |
| •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의원발의 조례안 들여다보기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이바지”

창원시의회의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사전 공개·게시·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신설
- 출장경비 지출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무여건 조성”

창원시의회의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재욱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생일휴가에 관한 사항 신설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일 일수 정비와 자녀 양육과 난임 치료를 지원을 위한 특별휴가 사항을 정함

“위원회 업무영역과 역할, 소관부서의 범위를 명확히”

창원시의회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정훈 의원
심사결과 수정가결



■ 주요내용

-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산업경제복지위원회’로 변경
- 미래전략산업국 조직의 포괄적 의미와 대표성을 가진 “산업”을 위원회 명칭에 반영하고자 함

“창원시의회의 청렴 수준 향상으로 시민의 신뢰 확보를”

창원시의회의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홍용채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공직자’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청렴 의무 사항 명시
- 정기적인 청렴교육 실시하고 청렴도 향상 실현
-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 관리를”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해련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함
-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해촉 사유를 추가 신설
- 비엔날레의 예술적 방향성과 독립성을 강화

“지하안전관리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공공안전 확보를”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이우완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지하안전관리계획원 수립·변경, 중점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등을 규정
-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규정

의원발의 조례안 들여다보기

“창원국가산단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무상대부 10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대표발의 김남수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기간을 당초 '20년'에서 '10년'으로 수정
- 무상대부 기간 외의 사항은 기존 동의안의 취지를 유지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146**회 임시회 (2025. 9. 1. ~9. 12.)
12일간 총 30건

의결목록

| | |
|---|------|
| • 창원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 창원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 •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 원안가결 |
| • 아이돌봄지원사업(창원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8·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마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2040 창원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
| •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 원안가결 |
|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 •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의원발의 조례안 들여다보기

“시민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

창원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정훈 의원

심사결과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규정
-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규정

“세무상담이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창원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홍용채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마을세무사의 역할과 상담대상, 상담방법, 상담실적 관리, 수당 등 제반사항

“지역 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효과적 제공”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성보빈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 공휴일 등 소아 진료 공백 시간에 소아경증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
-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운영실태 조사, 홍보 등에 관한 사항

“현수막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미관 향상에 이바지”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승엽 의원

심사결과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을 정비하고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실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집회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 기반을 마련”

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전홍표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
- 빗물받이 적용범위와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야간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으로 지역 내 교통질서 개선”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성보빈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비사업용자동차의 야간 주차 점유율이 연평균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80% 감면과 500명 이상 구성된 단체와 사전계약 체결한 경우 50% 감면 신설

의원발의 조례안 들여다보기

“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회복력 제고”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황점복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따른 보험료, 어업재해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 등 어가의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 개선으로 재난 대응에 효율성·신속성 향상”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강우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부득이한 사유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차장이 모두 같은 사람일 경우 본부장이 지정하는 실·국·소장 중 1명을 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5분 자유발언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5분 자유발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 용 채 의원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전통시장 ‘화재 알림 설비’ 설치·관리해야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월 17일)



전통시장에 불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알림 설비’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월 새벽 1시, 광주광역시 송정 5일장에 불이 났을 때 화재 알림 설비 덕분에 6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해 대형 참사를 막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현재 창원시 내 76곳 전통시장 가운데 화재 알림 설비가 설치된 곳은 14%(11곳)에 불과하다. 또한 화재 알림 설비가 설치됐더라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9월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 당시 모든 점포에 화재 알림 설비가 설치돼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재 알림 설비 설치 유도 인센티브 △전문가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또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46.4%가 전기적 요인인 만큼, 근본적인 위험을 없애기 위한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성 보 빈 의원 (상남·사파동)

사파동성종합상가에서 쏘아 올린 작은공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월 17일)



‘사파동성종합상가’는 1992년 개장해 올해로 34년 된 전통시장이다. 현재 제과점·병원·식당·학원·미용실 등 88개 소규모 점포가 운영 중이다. 이곳은 1986가구 아파트 입주민과 주택가 3000여 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장이다. 그러나 사파동성종합상가는 바닥 파손, 내외벽 도색 훼손 등 노후화가 심각하다. 특히 침하 때문에 기울어진 계단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은 언제 내려앉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상가는 2021년부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도전했으나 4년 연속 탈락했다. 올해로 5번째 도전인데, 경남도의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가 현장이 절박할 정도이다. 상가 곳곳에 침수 위험이 있고, 노후 전선으로 화재 우려가 있으며, 파손된 시설의 낙상 위험 등이 있다. 일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



이 정 희 의원 (중앙·웅남동)

공감을 얻지 못한 상징물 대상공원 '빅트리'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월 17일)



대상공원 '빅트리' 논란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에다 행정의 일방성, 형식적인 절차, 시민 소통의 부재 등이 집약된 결과이다. 빅트리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애초 무리한 벤치마킹으로 잘못된 출발이었으며, 도시계획위원회·경관위원회에서 전문가의 경고가 반복됐다는 것에 있다. 2019년부터 빅트리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전문가의 우려 의견이 있었다. “왜 하필 생태등급이 높은 곳에 설치하나”,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경관상 오히려 역효과 우려”, “기능도 미흡하고, 아름답지도 않다” 등 의견이 제기됐었다. 특히 경관위 위원들은 시민 공모나 소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럼에도 창원시가 “준공 일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공공조형물 사업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전문가 자문이 계획과 실행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천 수 의원 (구산·진동·진북·진전면, 현동, 가포동)

마산지역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충해야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월 17일)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재 마산·창원·진해 간 인프라 불균형을 보인다. 또한 창원시의 '파크골프장 500홀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파크골프장 8개소를 추가 조성해도 지역 간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와 관련해 올해 7월 기준 창원시가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모두 9개소(207홀)이다. 이 가운데 창원지역 2개소(108홀), 진해지역 5개소(72홀), 마산지역 2개소(27홀)가 운영 중이다. 파크골프장은 2027년까지 창원지역 6개소(207홀), 진해지역 6개소(78홀), 마산지역 3개소(45홀)로 늘어난다. 현재도 불균형인데 2년 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 창원시는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고 있다. 마산지역 어르신들은 “마산은 창원시가 아닌가” 등의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에 '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된 진동면 인곡리에 36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



박 해 정 의원 (반송·용지동)

대상공원 빅트리 조형물 신뢰 회복부터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월 17일)



대상공원 '빅트리'가 홍물로 조롱받고 있다. 공공사업 추진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들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설계 변경 과정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빅트리는 2023년 4월 공사를 시작하고, 시공사는 같은 해 9월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성과 유지 관리 문제를 이유로 계획 변경을 제안했다.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가 착공 6개월 만에 안전성 문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도시공원위원회는 2023년 11월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듬해 5월 경관위원회는 공원위 판단과 달리 상층부 소나무 형상 제거를 최종 승인했다. 창원시 대표 조형물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물을 승인할 수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조형물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오 은 옥 의원 (비례대표)

우주항공 · 예술인재 양성 위한 교육환경 필요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월 17일)



창원시의 미래를 위해 우주·항공, 예술 분야 고등학교 설립에 나서야 한다. 창원시가 명실상부한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도시임에도 전문 교육기관이나 인재 양성 시스템이 부족하다. 현재 창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회원사 20개 기업이 있다. 정부는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경남 등에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 중심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남의 중심 도시인 창원시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창원과학고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분야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예술고등학교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창원에는 '창원예술학교'가 있으나 일반고 3학년만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계가 있다. 예술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립 예술고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황 점 복 의원 (회원1·2, 석전·회성·합성1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주변 교통개선 촉구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월 17일)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대에 조성하는 '자족형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 교통 혼잡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서마산 나들목(IC) 인근 북성로 일대의 차량 흐름이 우려된다. 이에 △북성초교~한효맨션 지하차도 설치 △마재고개~마산여중 우회도로 개설 △창원 내서~함안 여항 국지도 67호선 착공 등이 필요하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은 회성동 일원에 행정, 주거, 업무 기능을 집약해 2026년까지 조성된다. 이미 서마산IC를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 또 회성공영주차장에서 서마산IC 사거리까지 약 650m 구간에 5개 교차로 설치로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성로 지하차도를 통해 차량 흐름을 증대시키고, 마재고개~마산여중 우회도로를 통해 교통량을 분산해야 한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의 거대한 도심 기능이 교통망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교통체증, 소음 등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 우 완 의원 (내서읍)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본연의 기능 살려야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7월 17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하 민주전당)의 임시 개관을 중단하고,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시·교육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민주전당 건립사업 시행 근거에 따라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보존해야 한다. 이어 공산·전체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민주화운동이라 우기거나 민주전당을 도시의 성장과 산업화 과정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전시물은 너무나 빈약하고, 그나마 있는 전시물에는 시민이 누구에게 항거했고, 왜 항거했는지 등 역사적 맥락이 빠져 있다. 오히려 마산의 산업화 과정을 전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한 장본인의 과오를 공적으로 덮으려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이다. '민주성지'라는 마산의 역사이자 정체성을 온전히 담아내고, 시민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김 묘 정 의원 (팔봉·의창동)

민주주의전당 정상화, 가치회복 출발점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7월 25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하 민주전당)이 기능과 존재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간의 배치와 전시·콘텐츠 재구성이 시급하다. 민주전당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면에 외국 명언을 새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어린이 공간에도 외래어가 과도하게 사용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민주주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성격과 맞나는 물음표가 뒤따랐다. 건물 내부 전체적으로 대부분 비어 있어 다소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마산 앞바다를 바라보는 휴게공간과 공간적 배치가 아쉬웠다. 마산 앞바다는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떠오른 곳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분노를 일으켰고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상징적 장소이자 중심이 되는 곳이다. 단순히 휴게공간이 아닌 민주화를 위한 싸움이 시작된 장소이자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장소이다. 하루빨리 민주전당이 민주주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



이 해 련 의원 (충무·여좌·태백동)

창원의 봄을 기억하십니까?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7월 25일)



세계적인 비디오 아트 거장 백남준의 작품인 '창원의 봄' 복원을 위해 전담반(TF)을 구성해야 한다. 창원의 봄은 지난 2000년 백남준 선생이 완성한 작품으로, 10~25인치 브라운관 93대로 예술 정신을 구현한 문화예술 유산이다. 특히 백남준의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 이름(창원)을 담은 작품이다. 그러나 창원의 봄은 현재 매주 수요일 4시간씩만 가동하고 있다. 작품의 노후화, 기술의 단종, 그리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행정이 맞물려 창원의 봄은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있다. 창원시 역시 복원 철학과 기술을 모색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보존·복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현재 창원문화재단의 예산과 조직으로는 복원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국립현대미술관이나 민간 전문기업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예술이 살아 있는 창원'의 미래가 될 것이다.



서 영 권 의원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시내버스 통상임금'과 '파크골프장 운영개선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7월 25일)



시내버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로 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업체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사례도 있다. 서울과 부산은 이미 법률 자문단과 대응팀을 구성해 조기 합의, 분할 지급, 가산금 면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창원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어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는 탄력적 개방, 안전 강화,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빠르게 날아가는 공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으나 창원시의 상당수 파크골프장에는 홀 간 안전망이 없거나 얇은 경계망만 세워져 있다. 특히 마산 호계 파크골프장 B구장 8번 홀은 스윙 방향이 9번 홀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어 충돌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또 창원시가 파크골프장 유료화를 시행하면서도 서비스는 미흡하다. 김해시는 에어컨을 설치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만큼 운영개선을 촉구한다.



백 승 규 의원 (가음정·성주동)

민주주의전당 자문위 구성, 신뢰회복 관건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7월 25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하 민주전당)과 관련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례가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명시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고수할 이유는 없다. 민주전당은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보존하는 북한역사문화공간으로, 개관을 앞두고 운영자문위원 위촉 논란이 벌어졌다.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면서 시민사회와 언론, 지역단체의 반발이 이어졌다. 법저체가 당연직 위원은 특정 직위에 의해 자동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민간이나 타 기관 인사는 부적절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인 조례와 관련해 원안에는 실·국·소장만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으나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정회 이후 수정안 형식으로 의결됐다. 시의회에서조차 공개 토론 없이 변경됐다면 밀실 행정을 피할 수 없다. 자문위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해 소통과 통합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



박 강 우 의원 (비례대표)

장기 표류 대형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며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7월 25일)



창원시의 장기 표류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시행자 지위 박탈 등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 회생 신청으로 지연이 불가피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미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됐고, 이대로 간다면 매몰 비용만 늘어날 뿐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두 다른 이유로 지연되고 있지만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협의 부족, 책임 회피, 그리고 현실을 외면한 갈등 구조에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는 일이다. 표류 중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중립적인 조정기구 구성, 실무협의체 가동, 타당성 재검토, 우선순위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대형 현안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



남 재 욱 의원 (내서읍)

마산, 과거의 영광을 넘어 미래로 다시 건질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7월 25일)



한때 대한민국 제7대 도시로 경남의 경제·행정·문화의 중심지였던 마산이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향의 도시, 민주화의 성지, 산업화의 중심지 등 이 세 가지 위대한 정체성은 마산의 큰 자산이었다. 하지만 2010년 통합 후 명칭도, 행정기관도 모두 창원에 몰려버린 구조적 불균형을 만들었다. 현재 마산지역 인구는 35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0만 명을 웃돌았다. 창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과 구도심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폐점한 지 1년이 넘는 롯데백화점 마산점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연면적 4951㎡에 달하는 마산시의회 청사는 현재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이 사용 중이다. 마산지청은 2026년 완공하는 회성동 복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한다. 마산의 특성에 맞는 부서가 마산으로 이전하는 것 또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산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문 순 규 의원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파크골프장 유료화 정책 문제점 개선 방안

제145회
창원시의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7월 25일)



파크골프장 유료화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연회비 인하 △노년층 할인 기준 현실화 △계절별 운영시간 확대 △파크골프장 확충 △편의시설·안전장비 보완 등이 필요하다. 현재 10만 원인 창원시 파크골프장 연회비를 5만 원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파크골프장 연회비를 고려해 창원시도 시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재 양산시는 7만 원, 밀양시는 5만 원, 통영·고성·창녕·산청 등은 무료다. 또 65세 이상은 50% 할인을 적용하고, 75세 이상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절기에는 저녁 7시까지, 동절기에는 일몰 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계절별 상황에 맞춰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수요만큼 파크골프장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파크골프장에 화장실, 그늘막, 식수대, 심장제세동기 등이 충분하지 않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전 홍 표 의원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시내버스 요금 인상만큼 서비스도 올려야

제145회
창원시의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7월 25일)



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시민의 신뢰·서비스도 함께 올려야 한다. 창원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일반인 기준 200원 인상된다.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100~150원 오른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더라도 공공요금마저 오르는 현실은 시민에게 큰 부담이다. 특히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요금 인상에 걸맞은 체질 개선과 서비스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친절도 향상과 기사 교육 내실화 △노선 다양화 및 교통 소외지역 해소 △환승 편의성 확대와 배차 간격 합리적 조정 △승하차장 시설 개선 및 차량 청결도 유지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요금 인상이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면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성이 나타나야 한다. 또한 버스 업체도 자구 노력을 게을리해선 절대 안 된다.



김 남 수 의원 (봉림·명곡동)

사화공원 공사, 명서2동 주민 피해 해결을

제146회
창원시의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월 1일)



사화공원 개발 공사로 인한 명서2동 주민들의 피해 해결을 촉구한다. 주민들은 2021년 10월 공사 시작 후 먼지 날림과 소음은 물론, 주택 균열과 누수 등이 발생했다고 호소한다. 주민들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지난해 10월까지 창원시와 12차례의 민원협의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창원시와 시공사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 창원시와 시공사에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보상을 요구한다. 사화공원 사업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명서2동 주민들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주민들이 고령이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창원시와 시공사가 무시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



최 정 훈 의원 (이동, 자은·덕산·풍호동)

방치된 진해변전소, 활용 계획 마련 시급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월 1일)



2022년 착공한 진해변전소 옥내화 사업이 준공 목표를 넘겨 지연되고 있다. 원인은 고객 전용선로 인출 변경과 관련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구매업체 간의 협의 난항, 잔여 부지 활용 문제 등이다. 한전은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잔여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사업비 충당만을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는 1만 2,631㎡ 규모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주변 도로를 개선해 달라고 희망하고 있다. 변전소 옥내화 사업은 단순히 미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 안전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김 혜 란 의원 (팔룡·의창동)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창원이 되어야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월 1일)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2023년 9월 제127회 임시회 때도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4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출생아 수는 1만 3,100명으로, 10년 만에 처음 반등했다. 합계출산율도 0.83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창원시의 출생아는 4,400여 명으로 도내 최다였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과연 창원시는 정말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도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은 거창, 사천에도 설립될 계획이다. 창원시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저출생 극복 의지를 천명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김 미 나 의원 (비례대표)

수영장 플라스마 수처리 시스템 도입해야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월 1일)



창원시 공공 수영장에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마 수처리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수영장 물은 일년내내 물을 갈지 않고 소독제만 넣어서 걸러내는 시스템이고 염소소독제와 땀, 소변이 반응하면 발암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이에 수질 관리에서 플라스마 수처리 기술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은 화학약품 없이도 살균과 탈취 효과가 뛰어나고, 부산물 생성도 최소화할 수 있다. 플라스마 수처리 기술은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로도 유해 오염 물질과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들더라도 약품 사용 절감, 유지관리 비용 감소, 시민 건강 증진 등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성 보 빈 의원 (상남·사파동)

황톳길 방치하면 고생길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1차 본회의
(9월 1일)



올해 초, 지역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성산구 대방동 368-1에 대방 경관녹지 맨발걷기 황톳길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맨발걷기 황톳길 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 △세족장 등 기본 편의시설 추가 확충 △배수 및 유실 방지 구조 설계 △장마철 유실 구간 점검 △긴급 복구 등 사후관리 예산 확보 등이다. 지난 2월 기준 창원시에는 의창구 13개소, 성산구 14개소, 합포구 11개소, 마산회원구 19개소, 진해구 10개소 등 총 67개소의 맨발 걷기 길이 운영 중이다. 유실과 방치가 지속되어선 안 된다. 이에 계절별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창원시가 '더 걷기 좋은 건강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 원 주 의원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마산해양신도시, 시민 활력 공간으로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1차 본회의
(9월 1일)



마산해양신도시 공공개발구역 일부에 '파크골프장'을 임시로 조성해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수년째 방치된 땅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지금 최선이다. 마산해양신도시는 5차례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됐으나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체 면적 64만 2,167㎡ 중 공공개발구역은 43만 9,048㎡다. 이 같은 제안은 현재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적합한 부지는 부족하고 특히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마산합포구는 파크골프 이용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파크골프장은 향후 용도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권 성 현 의원 (동읍, 대산·북면)

어르신 이용 파크골프장 복지 개선해야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1차 본회의
(9월 1일)



고령사회에서 여가와 건강은 중요한 복지이므로,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해야 한다. 파크골프장 유료화는 오히려 어르신들의 이용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으로 파크골프를 즐기기 어려운 노인이 많아질 수 있다. 파크골프는 사회적 교류에도 큰 도움이 되어 '시니어 스포츠의 꽃'이라 불리고 있다. 이용료 면제 등이 실현될 때, 모두가 즐기는 진정한 건강·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아울러 북면 지역에는 파크골프장을 확충해야 하며, 하천 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89홀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정 순 욱 의원 (경화·병암·석동)

통합 15년을 돌아보면서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9월 1일)



2010년 진해·마산·창원이 통합되어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 비효율적이고 기대 효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 통합 당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재정 확충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5년 동안 보통교부세는 출범 이전 5년보다 52.7% 감소했다. 도시 규모가 커진 창원시는 자체 수입 능력이 높다고 평가되어 지원이 줄어드는 역차별까지 발생했다. 통합 창원시는 구조적인 재정난과 효율성 부재에 직면해 있다. 진해는 진해답게, 창원은 창원답게, 마산은 마산답게 하기 위해 각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김 영 록 의원 (가음정·성주동)

창원 연고 프로스포츠구단에 공평 지원을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9월 12일)



창원시가 NC다이노스에 올해부터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면서 다른 스포츠 구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 이후 연고지 이전 문제가 대두되자, 창원시는 NC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상황이다. 하지만 프로 농구팀 LG세이커스는 올해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지역 팬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나 홈구장의 노후화 문제로 구단과 선수단, 팬들의 불편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LG세이커스의 홈구장인 창원체육관은 국제농구연맹(FIBA)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전광판, 녹물이 나오는 화장실 등 탓에 초라해 보인다. 다른 지역 지원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래기간 지역에 머무르던 연고 구단을 떠나보냈다는 낙인이 한 번 찍히게 되면 다른 구단을 유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창원시가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창원시체육회에 소수 체육단체 대한 아낌없는 지원도 당부했다.



박 선 애 의원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폭염에 야외근로자 안전대책 마련 필요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9월 12일)



기후위기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지난해 대비 28% 증가하고 9월까지도 폭염경보가 발효되면서 폭염이 상시적 재난으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그늘 한점없는 야외 노동 현장에서는 '휴식시간이 더 힘들다'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동형 그늘막이나 간이 냉방 컨테이너를 설치해, '휴식 시간 권고' '무더위 심터' 운영 등 권장 위주의 행정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야외용 냉방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임차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유도하는 정책 검토와 폭염경보시 작업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환경미화, 공공근로, 도로보수 등 야외 업무 종사자에게 선도적으로 적용한다면,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심, 그것은 선택이 아닌 노동자의 권리'이다. 이제 행정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김 상 현 의원 (충무·여좌·태백동)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체계 마련 촉구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4차 본회의
(9월 12일)



창원시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군항상권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역 정체성과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재생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들 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도시 활력을 되찾는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진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사업 완료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 청계천, 경춘선 숲길공원, 부산 감천문화마을 등은 지속적인 관리와 콘텐츠 보강을 통해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에 창원시도 안정적인 예산 확보, 전문 인력 배치, 장기적 운영 로드맵 수립, 정기적 성과 평가 시스템 마련 등 통합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조성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재생사업의 진정한 완성이다. 창원시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 모델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서 명 일 의원 (회원1·2, 석전·회성·합성1동)

미끄럼 방지 페인트, 시민 안전 위협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4차 본회의
(9월 12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색한 미끄럼 방지 페인트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미끄러워져 사고 위험을 키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 점검 △도색 방식 개선 △재료 개선 등이 필요하다. 미끄럼 방지 페인트에 석인 돌 알갱이는 도색한 후 차량에 의해 쉽게 마모된다. 결국 코팅막만 남아 비 오는 날에는 빙판길처럼 변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실제로 함양, 전주, 군포, 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이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시 버스 기사 사이에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자전거 도로도 같은 문제가 있다. 1년마다 정기 점검을 통해 마찰력 충족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또 포장재를 도로 전체에 칠하는 것이 아닌 부분 도색으로 마찰력을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해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미끄럼 방지 효과가 높은 다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심 영 석 의원 (웅천동, 웅동1·2동)

웅천 역사 문화 계승·발전 대책 마련 촉구

제146회
창원시의회의(임시회)
제4차 본회의
(9월 12일)



창원시는 2020년 490억 원 규모로 웅천 역사문화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웅천에는 웅천읍성, 웅천빙고지, 자마산성, 웅천왜성, 하마비, 주자정동, 효장각, 왜관터 등 역사·문화 유산이 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18명의 자문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웅천읍성 한마당 축제'를 4년째 진행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진해문화유산지킴이'를 결성해 웅천향교 하마비 환원, 진해 금석문 탁본 85점과 웅천읍성 명문석 탁본 10점 추가 발굴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사·문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데 비해 경남도와 창원시의 전담 부서의 활동은 미약하다. 경남도는 창원시에 예산 반영을 떠넘기고, 창원시는 도 문화재라고 떠넘기는 핑퐁 게임을 4년째 반복하고 있다. 웅천의 역사와 문화에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 은 옥 의원 (비례대표)

결혼 비용 절감, 공공예식 활성화 제안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9월 12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평균 비용은 2,074만 원에 이르고, 식당 대관비는 150만~390만 원, 스프메 비용은 약 292만 원 수준이다. 창원시는 진해아트홀, 창원의집 등을 공공 예식장으로 제공하나 단순히 공간만 내어주는 방식은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어렵다. 예비부부가 원하는 공공예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발굴하고, 장식과 프로그램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저렴하고 실력 있는 스프메 업체를 발굴·홍보하고, 착한가격 제도를 도입해 비용 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 체면과 비용 사이에서의 고민이 아닌 기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박 승 엽 의원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허성무 국회의원은 무엇을 위해 정치하는지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9월 12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과 관련해 일부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정식 개관을 방해하고 있다. 창원시 전 시장 허성무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단체의 의견이 마치 창원시민들의 의견인 것처럼 대변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분통해하고 있다. 창원시와 시민을 생각한다면 노력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이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연간 300여억 원, 20년간 수소를 구매한다는 '구매 확약 담보'를 제공했다. 해당 대형 사업의 실패로 창원시 재정과 미래가 큰 위기임에도 허성무 전 시장은 관심 한번 가지지 않는다. 창원시의회 특위 참석 요구에도 불참하고, 국회에서도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허성무 의원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제라도 액화수소플랜트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진 형 익 의원 (비례대표)

의창·성산지역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해야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9월 12일)



의창·성산구 지역을 아우르는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이용자가 너무 많아 복잡하다는 지적과 나이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여달라는 주장, 급식 인원이 부족하다는 요구 등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복지관 신규 회원은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에는 의창노인복지관 855명, 성산노인복지관 1,136명, 마산합포노인복지관 885명이 신규 등록했는데, 2024년에는 각각 1,080명, 1,360명, 976명으로 증가했다. 성산노인복지관을 예로 들자면 하루 1,400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데, 관리 인력은 14명에 불과하다. 또 120석 규모인 식당에서 하루 500인분 가까이 제공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요 분산이 필요하다. 현재 마산·진해 지역에서는 분관을 운영하고 있다. 의창과 성산은 분관만 운영하고 있어 한계가 분명하다. 의창과 성산 지역을 아우르는 분관 설치가 절실하다.



시정질문 및 답변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시정질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9월 4일

전 홍 표 의원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Q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창원시의 현행 행정적·정치적 조치 및 대응 방안은?

A **시장 권한대행** 공공개발에 대한 요구를 강조해 나가겠다.

Q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 지연과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둘러싼 항소심과 집행정지 가처분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계획은?

A **시장 권한대행** 세금 낭비와 행정 신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과거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편향성,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 일부 왜곡된 확인서 등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재감사에 대한 의향은?

A **시장 권한대행** 상황을 가정해서 예단할 수 없다.

Q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의 근본 원인이 된 가포신항 조성 시 잘못된 물동량 예측이 있다. 정부에 정책 실패를 요구하고, 공공개발 또는 투자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A **시장 권한대행** 국비 투입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 없다면 국비 공모 신청 등으로 추진하겠다.





시정질문 및 답변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9월 4일

문 순 규 의원
(양덕·합성2, 구암1·2, 봉암동)



Q 팔룡근린공원 밤골여울마당 조성사업이 무엇인지?

A 푸른도시사업소장 직무대리 어린이 테마존 조성사업으로 2023년 7월 14일 최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총사업비는 18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이다.

Q 테마존 조성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없었는데?

A 푸른도시사업소장 직무대리 타당성조사는 어린이 체험 마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다. 빨리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

Q 창원시는 상복공원 조성 당시 시의 정책 사업에 생존의 터전인 자신들의 땅을 내어준 주민들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주민 갈등을 위한 중재 계획은?

A 복지여성보건국장 편입지구회와 중재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Q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창원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에 따른 대응책은?

A 미래전략산업국장 AI와 IT분야 발전을 위해 지원하겠다.





시정질문 및 답변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9월 4일

정 순 욱 의원
(경화·병암·석동)



Q NC다이노스가 요구했던 21가지 개선안은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시민들의 동의 없이 혈세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NC가 1346억 원의 지원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연고지 이전 계획이 있는 것 아닌지?

A **시장 권한대행** NC와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창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Q 마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대응이 없다. 오히려 연고지 이전에 찬성하는 것이 아닌가?

A **시장 권한대행**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함께 협력하고 있다.

Q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전시가 마산지역의 민주화 투쟁 역사를 무시한다.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조례에 대해 시장이 재의요구권을 하지 않은 이유는?

A **시장 권한대행** 집행부가 시의회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석동 청사와 상공회의소 건물이 현재 몇 년째 방치되고 있다. 활용 방안은?

A **시장 권한대행** 리모델링해서 기관 등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





시정질문 및 답변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9월 4일

이 종 화 의원
(이동, 자은·덕산·풍호동)



Q 등록 경로당은 냉난방비 지원을 받으나, 미등록 경로당은 사각지대에 있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폭염·한파 쉼터로 지정하고 지원할 의향은?

A **재난대응담당관 직무대리** 시에서 운영 주체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

Q 정부의 준경로당 제도 도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 실태 파악과 지원이 시급함.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은?

A **복지여성보건국장**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

Q 고사목 증가와 관리 미흡으로 벚꽃 생태계가 위협받음. 체계적 관리·보전을 위한 장기 로드맵과 대체 식재를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A **시장 권한대행** 100% 공감하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

Q 출산·육아 당사자들의 80% 이상이 출산·육아 공공 앱 구축을 요구하는데 시의 계획은?

A **시장 권한대행** 전적으로 공감하며 구축방안을 고민하겠음.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9월 5일

손 태 화 의원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Q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심의 등의 아무런 절차 이행 논의도 없이 민간 연구기관에 5년간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협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시장 권한대행** 공유재산심의회도 했고 의회 의결도 거쳐 양여했다.

Q '빅트리' 조형물이 34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사업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A **시장 권한대행** 건설사가 일부 사업 관련 자료 제출에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사업 완료 이후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

Q 수백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가 단순한 사후 검증만으로는 시민들의 의혹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

A **시장 권한대행** 필요하면 감사를 통해서라도 점검하겠다. 사업비 문제는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빅트리의 장단점 파악과 시설 개선 방안을 찾아 창원의 상징적인 심터로 만들겠다.





시정질문 및 답변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9월 5일

구 점 득 의원
(팔룡·의창동)



Q 공원일몰제로 인한 팔룡공원 토지 보상이 비합리적으로 이뤄졌다. 팔룡공원은 급경사지인데 평지에 있는 다른 공원보다 몇 배 높은 가격으로 보상됐다. 경사도 18도 이상 지역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계획을 세워놓고도 20도 이상이 70%를 차지하는데 마구잡이로 매입했다. 이유는?

A **푸른도시사업소장 직무대리** 2025년 5월까지 보상하지 못하면 공원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8필지를 우선 검토했다.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해 최선의 결과이다

Q 체계적으로 검토했다면 공시지가 기준 15억 원이 소요되는 8필지 대신, 8억 원으로 합리적인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는데 이유는?

A **푸른도시사업소장 직무대리** 그 당시에는 실효 될 우려가 커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Q 팔룡공원은 시 공원일몰제 현안 중 가장 깊은 모순을 안고 있다.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A **푸른도시사업소장 직무대리** 공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겠다.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9월 5일

박 선 애 의원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Q 진해신항 항계선 조정 문제는 단순한 항만 관할 구역의 조정을 떠나 수천 명의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정부의 부산항 항계선 조정으로 진해신항이 부산항 관할로 편입될 우려가 있다. 시의 대응책은?

A **해양항만수산국장** 2020년 12월 31일 해수부 제2020-231호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정되었고 올 연말 조정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 안타깝지만 정부 관할이라. 시차원에서 대응할 방안이 현재로서는 딱히 없다.

Q 27년 진해신항 일부 개항과 함께 마산항 물동량 감소에 따른 공동화 현상과 고용 축소를 대비한 시의 대응책은 있는지?

A **해양항만수산국장** 해양항만수산국장= 현재 마산항 화물 유치 보조금 지원 조례를 통해 13년간 60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외 항만센터 건립 등 지원방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다.

Q 마산항, 진해항 또 진해신항을 연계해서 창원시를 경남 항만권의 독립적인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전략은?

A **해양항만수산국장** 국제물류특구지역 지정을 이뤄내어 진해신항을 독립적인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시정질문 및 답변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9월 5일

박 해 정 의원
(반송·용지동)



Q 액화수소플랜트 지체보상금 소송비 대납'은 창진원의 정관과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한 불법자금 운영이다. 시인하는가?

A **창원산업진흥원장** 자체내규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시행했다.

Q 불법자금운영에 대한 조사·감사 의뢰 계획은?

A **시장 권한대행** 창진원의 소송비 대여가 심각한 비위 행위인지 내부 검토해 보겠다.

Q '액화수소생산시설 검증위원회 최종의견서'를 숨기고 시설 검증이 안됐다면 사업을 파행으로 몰아간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소지가 크다. 신속한 조사·감사 계획은?

A **시장 권한대행** 시정답변을 준비하며 알게 된 최종의견서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Q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소 버스 확대다. 창원시의 실행계획과 효성이 추진 중인 가포 액화수소충전소 착공 지연 관련 행정적 지원 계획은?

A **미래전략산업국장** 현 단계에서 수소차 확대와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이다. SK·효성 대기업을 만나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을 해나가겠다.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9월 5일

정길상 의원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 Q** 만날공원 버스, 대형 버스 주차장에 대한 용역 진행 상황과 목적은 무엇인지?
- A** **푸른도시사업소장 직무대리**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02년 10월에 진행했으며, 목적은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개장에 따른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 Q** 용역 결과대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 A** **푸른도시사업소장 직무대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요시에 하게 되어 있다.
- Q**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한 주차장을 조성 사업이 마산합포구는 한 곳도 없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 A** **교통건설국장**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구청별로 1개 정도 선정해 확보율을 높이겠다.
- Q** 만날공원 주차장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행정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데?
- A** **시장 권한대행** 주차 수요 상황을 한 번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다.
- Q**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서 진행할 의향은?
- A** **시장 권한대행** 세심하게 신경쓰겠다.





시정질문 및 답변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9월 5일

백 승 규 의원
(가음정·성주동)



Q 2019년 지정된 불모산 강소연구특구 지정이 6년이나 지났음에도 성과가 없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A **미래전략산업국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시 제시된 사업 추진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Q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4년 내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용도로 환원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강소특구 부지를 주거지로 전환할 가능성과, 장기간 협의 과정으로 시민 불편에 대한 대응 방안은?

A **시장 권한대행** 환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강소특구는 창원의 미래산업을 견인할 중대한 사업이다. 더 이상 변명은 용납될 수 없는 만큼 창원시는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내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전환까지 검토할 의향은?

A **시장 권한대행** 필요 시 대안도 검토하겠다.

Q 강소특구 용도를 아파트 단지로 바꾸어 인구를 유입하면 발전이 기대되는데?

A **시장 권한대행** 대안은 될 수 있다고 본다.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9월 5일

박 승 업 의원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Q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창원시의 분명한 입장은?

A **시장 권한대행**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

Q 창원시가 수천억의 혈세가 들어간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특정감사의 범위와 현황을 공개할 의향은?

A **시장 권한대행** 결과에 따라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Q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정상화만을 내세우는 것은 실무자와 결정권자 모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을 남기게 된다. 왜 창원시가 책임자 규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지?

A **시장 권한대행** 기존 감사관이 계약만료로 공석이 되고, 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전보가 되었을 뿐이다. 서둘러 보겠다.

Q 시민의 혈세가 책임 없는 행정으로 인해 계속해서 소모되고 있는데 앞으로 창원시의 대안은?

A **시장 권한대행** 최대한 해결방안을 찾겠다.





시정질문 및 답변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9월 5일

김 상 현 의원
(충무·여좌·태백동)



Q 옛 육군대학부지 조경공사 중 이식한 해송의 환수금액 적정성과 이식후 조경공사 하자이행 관리 부실 질의.

A **도시공공개발국장** 환수시 용역을 통해 금액을 산정하여 환수 조치했으며, 고사목은 구청에서 벌목 처리했고 관련 업무도 구청에 인수인계를 완료했다.

Q 구육대부지 준공후 이관받은 나무에 대해 소멸시효전 환수 청구와 처리계획은?

A **진해구청장** 하자보증시효 확인하고, 향후 재식재 검토하겠다.

Q 진해 내수면 맨발걷기·수변데크 사업 설명회와 시공 차이, 화장실 등 누락.

A **구청장** 화장실은 현장 확인 예정. 수변데크는 안전상 국립수산과학원 요청으로 추진됐다.

Q 도시재생사업의 사후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제도 마련 계획은?

A **시장 권한대행** 사후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
사후관리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해양수산부는 잘못된 물동량 예측을 토대로 마산항 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옛 가포해수욕장을 매립하여 '가포신항'을 건설하고, 3만 톤급 선박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마산만을 대규모로 준설해 수심 12.5m의 항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가포신항 인근 마산 앞바다에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해양생태계 훼손, 해수질 오염, 도시 경관 저해 등 수많은 환경적·도시적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마산시와 통합 창원시는 준설토 투기장 부지를 '마산해양신도시'로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민간자본 3,835억 원(2024년 기준)을 들여 인공섬 조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애초에 계획된 개발이 아니라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임기응변적 대응이었으며, 결국 현재까지도 마산해양신도시는 방치된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창원시가 부담한 인공섬 건설비용 가운데 994억 원의 원금이 남아 있고, 이미 지급한 이자만 400억 원이 넘는 실정입니다. 국책사업의 실패가 지방정부에 재정적 부담과 도시발전의 지체를 초래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최근 부산 동구의 임대건물로 연내 본부를 이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산해양신도시 부지는 바로 해양수산부가 초래한 문제의 결과물이며, 단지 부산 이전을 결정했다고 해서 과거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해양수산부는 마산해양신도시가 국가 해양개발 정책 실패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

하나. 마산해양신도시를 해양수산부 유관기관 및 공공기능의 거점지로 적극 검토하여, 해당 부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하나. 해양수산부는 준설토 투기장 조성의 후속조치로써, 해양환경 복원, 해양문화·관광기능 연계, 해양산업지원 복합시설 유치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하나. 정부는 마산해양신도시의 공공적 활용과 지방정부의 재정 회복을 위해 국비 지원과 특단의 재정대책을 마련할 것.

국가가 결정한 국책사업이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고,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결자해지의 책임감으로 마산해양신도시를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산업의 재도약 거점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때입니다.

창원시는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기다리며, 해양수산부가 자신의 정책적 결과물에 대해 실질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창 원 시 의 회

국가유공자 지원 지역 불균형 해소 건의문

현재 대한민국에는 2024년 기준 833,042명의 보훈대상자가 있으며, 이 중 국가유공자는 655,662명으로 전체의 약 7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수많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5.5%, 2024년 5.0% 등 2년 연속 보상수준을 인상했으며, 거동이 불편해 생활조정수당 등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위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간 보훈 지원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보훈 정책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장관 명의의 표창을 수여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전수당 인상을 유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25년 1월 기준 정부는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다수의 지자체가 참전수당을 인상해 왔습니다. 그 결과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참전수당을 합산한 전국 평균 지급액은 월 23만 6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초지자체의 참전수당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수당을 합산한 지급액은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충남 당진시, 아산시, 서산시와 강원도 화천군이 각각 5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역과 기초지자체 수당을 합산하면 최대 60만 원에 이릅니다. 경상남도 내에서는 산청군과 거창군이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수당 합산해 총 3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현재 총 2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에 따라 보훈 지원금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예우는 더욱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현실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가 거주지역에 따라 수십만 원의 수당 차이를 겪는 것은 정당한 보훈 정책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약속한 '더 두터운 지원'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훈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인 만큼, 국가가 중심이 되어 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훈 지원금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등 보훈 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국비 부담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 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유공자가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동등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일관된 보훈 정책이 구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간 보훈 격차를 해소하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등 보훈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을 대폭 상향하여, 전국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모든 국가유공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 간 보훈 정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 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통일된 보훈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모든 국가유공자가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및 후보자 재임명·지명 촉구 건의문

현재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른 초대 내각 구성을 위한 인선 절차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도덕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장관 후보자들을 무리하게 지명하거나 임명하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

수많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민낯이 다 밝혀졌지만,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함께 가야 할 비즈니스 메이트인 보좌관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제기되었다. 지명 초기 논란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는 논란에 대해 부인했으나 이후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우려되는 것은 고위 공직자의 권력 남용과 공직자 윤리와 사회 정의 실현에 위배 되는 후보자를 두고 대통령실은 방관자의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해당 후보자는 국민의 공분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까지 이어지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미 임명이 되었지만 한 후보자의 경우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내부 정보 활용으로 재산 증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후보자와 「농지법」을 위반하여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가족처럼 지낸 지인과 공동 경작을 했다고 설명하는 후보자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세금 탈루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된 후보는 가족 간 월세 계약을 해야 하는지 물렸다면 편법 증여를 인정하는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는 등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였다면 해당 후보자들은 7대 인사 배제 기준 중 부동산 투기에 해당되어 임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아무런 원칙과 기준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 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격 없는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을 무시하고, 기준을 무너뜨리는 인사가 계속 된다면 국정 신뢰도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국민을 기망한 책임은 모두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고 자격 없는 장관 후보자 지명과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장관급 인선에 대한 인사 배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라.

하나. 대통령실은 명백한 도덕성 결여, 갑질 등 국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적극 검토하라.

하나. 대통령실은 청문 자료 의무 제출, 국민 참여형 검증제도 도입 등으로 검증을 강화하고 후보자의 이력과 행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정을 통해 적합 인사로 재임명·지명하라.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문

최근 북한 평산지역 우리농정련공장에서 발생한 침전지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어 한반도 하천을 따라 우리 해역으로 유입되었다는 심각한 정황이 여러 매체와 위성사진,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 침전지 폐수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오염된 폐수가 예성강을 거쳐 강화만, 경기만, 그리고 서해로 광범위하게 흘러 들어가는 상황은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서해 인근 지자체와 주변국에게도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방사능 오염사건은 단순 환경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권 침해, 해양생태계 교란, 수산업·어업 등 경제영역 손실, 미래세대 위험까지 포괄하는 국가적 위기임에 틀림없다. 전국 각지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철저한 현장조사, 신속한 방사성 물질 검증, 객관적 시료분석 등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외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도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그리고 투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7월 4일부터 2주간 한정적으로 10개 지점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 방식과 범위, 투명성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위성 이미지만으로는 방사성폐수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명확히 규명할 수 없는 만큼 민관합동 조사단의 실질적 현장 조사와 과학적 시료분석이 시급하며,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 불안 해소의 첫걸음임을 직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북한 핵 폐수 방류의 피해가 인접국, 국제사회에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IAEA 등 국제기구와의 실질적인 협력과 국제적 감시체계 구축 역시 필수적이다. 1896년 캐나다 트레일 제련소 사건처럼 방사능·중금속류 폐수의 장기 해양오염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을 교훈 삼아 우리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북한 우리농정련공장 침전지 폐수의 방류 실태와 그로 인한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에 대해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단기간의 표본조사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분석 체계를 마련하여 서해 및 인접 해역의 환경 변화와 방사선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관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여, 현장 시료 채취와 독립적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나, IAE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주변국, 국제사회와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방안을 강화하여, 국제적 신뢰와 국민적 안심을 확보하라.

하나, 그 결과 방사성 오염 우려가 실재할 경우 국민 건강 보호대책 마련, 해양·수산업 피해 지원, 외교적 항의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와 국가 환경주권 수호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과학 기반의 위기 대응 체계를 재구축하라.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소규모 건축 시장 부실 시공 근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문

소규모 건축 시장은 대한민국 건설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시장 침체와 부실 시공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요건 강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역설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했고 허술한 관리 시스템으로 소규모 건축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 졌다. 주거 형태의 다양화와 도시 재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소규모 건축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지금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그리고 건축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과감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495㎡ 이하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했으나 2018년부터 그 기준을 200㎡로 대폭 강화하여 연면적 200㎡가 넘는 주거·비주거용 건축물과 다가구·다중주택 등을 건설업을 등록한 정식 건설사만 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전 강화와 위장 직영시공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이며 특히 창원과 같은 계획도시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이다.

경기도 감사관실의 최근 감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었는데 4층 이하 빌라, 다세대 건축물, 2~3층 규모의 상가 건축물 상당수가 무자격 건설기술자에 의해 건축되었음이 밝혀졌다. 현행법상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하며 현장별로 1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달랐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1만 7천여 건의 조사 대상 건축 현장 중 무려 6천777개소에서 등록된 건설 기술자가 578명에 불과하여 건설기술자 1인이 평균 11.7개의 현장을 관리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드러났다. 이는 명백히 건설기술자 자격증 대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격증 대여는 불법적인 면허 대여와 합법적인 면허 대여(건설 회사에 입사하여 시공) 두 가지 형태로 나뉘지만 결과적으로 현장에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을 초래한다. 불법적인 면허 대여는 유령 회사와의 계약으로 이어져 건축주에게 큰 위험을 안기며, 합법적인 형태 또한 공사비 상승의 요인이 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무자격 기술자 관리가 실제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감사관실이 샘플로 확인한 5개 건축 현장 중 3개소에서 기술자 자격증 대여가 확인되었고 해당 공사장에서는 내력벽 임의 생략, 철근 부족, 콘크리트 미충진 등 심각한 부실 시공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건축주의 재산 손실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허위 신고가 가능한 현행 신고 시스템과 현실과 동떨어진 법적, 제도적 미비점에 있다. 소규모 주택 건축을 위한 종합 건설 면허 기준이 5명 이상의 기술 인력을 요구하는 등 소규모 건축 시장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건설업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종합건설회사는 사실상 소규모 건축 시장에 참여를 거의 하지 않고 소규모 건축업자는

기술 인력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여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실제로 소규모 건축 시장이 침체되어 유관 업체나 기술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건축 요건의 강화로 면허의 불법 대여와 책임 전가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변화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현행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건의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소형 건설업 면허를 신설하고, 건축물 규모에 따른 면허 세분화를 추진해야 한다. 현행 종합 건설 면허 제도만으로는 소규모 건축 시장의 현실과 전문성을 담아낼 수 없다. 소규모 건축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면허를 신설하고 아주 작은 규모의 건축부터 단계별로 면허 기준을 세분화하여 각 규모에 적합한 역량과 조건을 갖춘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불법적인 면허 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건축주에게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공 환경을 제공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소규모 건축인들에게는 정당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둘째, 건설 기술자 관리 및 신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현행 시스템은 건설 기술자 자격증 대여 및 허위 신고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건설 기술자의 현장 배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중복 관리를 철저히 제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격증 대여를 통한 무자격자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는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공사 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다.

셋째, 소규모 건축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정히 해야 한다. 자격증 대여를 통한 부실 시공 적발 시 강력한 행정 처분 및 사법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 및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여 부실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언제나 중요하다. 소규모 건축 시장의 건전한 성장은 단순히 몇몇 건축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현장의 목소리와 감사 결과를 경청하고 소규모 건축 시장의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이상기후 대응과 창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의문

기후·생태 위기를 방지한다면 우리 모두의 생존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대형 산불과 산사태로 인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생태계 훼손은 현실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재난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폭염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가시화하고 있다.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농축산물 피해는 물론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한 정전 우려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극한 호우로 인해 도시 침수, 교통두절, 인명피해 등 재난이 반복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 재난은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질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는 산업의 존속과 노동자의 삶,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의제다. 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이는 기계·방위·첨단 제조업이 밀집한 창원국가산업단지와 같은 산업 중심 도시의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다.

현재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주요 산업단지에서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력망과 변전설비의 한계는 뚜렷하다. 이는 RE100 달성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도 장애가 될 수 있어,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전력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창원산업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탄소중립이라는 대의 아래 산업계·노동계·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원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과 창원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익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폭염·극한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저감(도심열섬 완화, 에너지 취약층 지원)과 침수 예방(배수망 정비, 하천 생태 복원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국가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부금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주요 산업거점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라.

하나.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전환 과정에서 산업계·노동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정한 전환 지원계획을 수립·지원하라.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인구감소지역 지정 법령 개정을 통한 창원시 '구(區)' 단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촉구 건의문

창원시는 2010년 행정구역 자율 통합으로 마산·창원·진해 세 개 시가 통합되어 5개의 비 자치구(행정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전체 고령화율(65세 이상 고령인구)은 2025년 6월 기준 20%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경제 활동 인구의 급감, 청년 유출 등으로 중심 상권 침체와 지역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단위를 시·군·구로 한정함에 따라, 창원시처럼 행정구역 개편으로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區)' 단위를 둔 도시에서는 인구감소와 행정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창원시와 같은 비 자치구는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창원시 행정구별 평균 인구는 인근 부산시 자치구의 평균 인구와 유사한 수준이며, 행정구 면적은 자치구 대비 광범위하고 많은 행정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수한 지방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령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근본 취지를 담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정책 공약인 인구 소멸 위기 지역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한다.

하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행정구(區)의 위기 해소 및 실질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을 통해 정책 수혜 형평성 제고 및 자율행정 통합 도시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을 위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 운영 촉구 결의문

한국지엠은 지난 201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2027년까지 국내 생산시설 유지를 조건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7억 5천만달러의 투자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계약 만료를 불과 2년 앞둔 2025년 5월, 한국지엠은 창원정비센터를 포함한 일부 자산의 매각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은 다시 구조조정과 공장 철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창원공장은 2018년 구조조정 당시 조립부 통합과 대규모 희망퇴직을 통해 고통을 분담한 상징적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산 매각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수출액은 약 36억 달러로, 이는 창원시 전체 수출액(228억 달러)의 15.7%를 차지하는 것이다. 현재 협력사를 제외한 직접 고용 인원은 약 2,800명이며, 2·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관련 종사자는 약 2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지엠의 철수 또는 생산 축소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전체 산업과 고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창원시의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GM 본사는 2018년 체결한 계약 이행에 적극 나서고, 지속적인 창원공장 운영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창원공장의 수출 기여와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엄중히 인식하고, 한국지엠의 생산 축소나 철수를 막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한국산업은행은 GM 본사의 투자 약속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창원공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주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진해 「가덕도신공항-진해-창원」 철도 및 트램 노선 구축계획 반영 요구 건의문

진해 동부권은 웅동1동, 웅동2동, 웅천동의 주거지역과 부산·진해신항 전체 면적의 약 75.6%를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행정구역에는 67,000여 명의 내국인과 7,500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약 186,700명의 근로자가 항만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기간산업으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 제2창원국가산단, 진해신항, 국가지역전략사업 등의 사업과 함께 창원·진해국가산단, 마산자유무역지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 동남권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기간산업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하면서 진주, 여수, 강릉, 삼척 등 대부분의 지방 거점도시는 수도권에서 3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됐지만, 동남권의 핵심지역인 진해는 국가 철도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있고, 도시철도(트램) 노선에서도 제1차 타당성 조사에서 진해 동부권은 제외된 상황입니다.

또한, 진해 동부권(항만배후도시)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형 화물차, 초대형 화물선, 항만 부지 조성 등으로 인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소음 수치가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 취약지역이기도 합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항만 개발로 인해 28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진해 동부권 주민들은 그동안 지역 주민의 요구를 국가가 외면하자, 분노한 주민들이 「동부지역발전협의회」와 「진해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주민의 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와 같이 진해 동부권 주민들에게 항만 개발로 인한 피해만 강요하지 말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행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진해신항-진해-창원” 노선을 공약하여, 28년 동안 소외되어 실의에 빠져있던 진해 동부권 주민들은 대단히 기뻐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 주민의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은 항만 개발로 인해 생계 터전이 소멸된 어업 및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과 육상 및 해상의 물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 기준치 초과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및 트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진해 동부권에 위치한 부산·진해신항이 국가 미래 발전 동력인 트라이포트(Tri-port: 항만, 철도, 항공)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세계적인 항구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명실공히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입지를 조기에 확보하기를 기원하며, 국가와 지역 주민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금년 9월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 변경 계획 안」 선정 시 진해 철도노선을 반영하라.

하나, 2026년 상반기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시 진해 동부권까지 노선이 연장되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하라.

하나, 진해 동부권의 항만배후도시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히 시행하라.

하나, 국가와 항만배후도시 주민의 상생발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항만을 개발하고 관리하라.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문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우리 사회의 활력을 이끄는 핵심 주체이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 연령 기준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 현실과 괴리된 기준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청년의 취업, 결혼 및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기대수명 증가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해 과거와 달리 청년의 개념 자체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23년 5월 「청년기본조례」를 개정, 청년 연령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상향하였다. 이는 지역의 현실에 맞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2023년 기준)로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높아졌으며, 청년 인구 역시 2020년 1,050만 명에서 2030년 86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청년 연령 기준을 더 이상 34세 이하로 고정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근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여전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일부 조례나 개별 법령에서만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법적 기준이 사회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늦어진 사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청년들이 정책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간의 연령 기준 불일치로 인해 제각각인 청년 기준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같은 연령대임에도 거주 지역이나 적용 법령에 따라 정책 수혜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혼선은 청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제도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2025년 3월 발간한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청년 연령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연령기준 일원화보다는 최소한의 국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제는 '청년'이라는 정의를 더 이상 과거의 잣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제도는 청년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많은 청년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청년의 현실과 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만 39세까지로 현실화하고, 이에 따른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법령과 조례 간의 연령 기준 불일치로 인한 행정 혼선과 민원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국가 차원 청년 연령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 확대, 유전자 변형 작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이 미국의 요구사항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국민 건강, 식량 안보, 농업 생존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소고기 수입 기준 완화는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다. 광우병 우려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다. 2008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추진으로 인해 전국적 시위가 벌어진 바 있고, 다시 이 기준을 완화한다면 국민 불신과 소비자 반발, 한우, 육우 등 축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쌀 수입 확대는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식량안보를 훼손한다. 쌀은 국내 자급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작물로, 다수 농가의 주된 소득원이기도 하다. 현재 적용 중인 513%의 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며, 이를 완화하거나 확대할 경우 국내 쌀값 폭락과 농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국가 식량주권 약화로 이어진다.

유전자 변형 작물(GMO) 수입 규제 완화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한다. 유전자 변형 작물의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국민의 먹거리 선택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현행 규제는 정당한 과학적·윤리적 기준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를 완화할 경우, 식품 안전성 훼손과 국민 불신 확산은 불가피하다.

미국산 과일류 검역 완화는 국내 과수농가의 생존을 위협한다. 사과, 블루베리, 체리, 딸기 등 미국산 과일류에 대한 검역 완화는 병해충 유입 위험 증가와 함께 저가 수입 확대에 따른 국내 유통 질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과는 경북, 경남 등 주요 지역의 핵심 작목으로, 대량 수입 시 국내 생산 기반 전체가 위협받는다. 이는 농가만의 문제가 아닌 식량 주권과 소비자 안전 문제다.

정부는 농업의 공익성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단기적인 협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민 안전과 농업 기반 유지가 우선돼야 하며,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나 규제 완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적 공감 없이 추진되는 통상정책은 사회적 혼란과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국가 식량주권과 농업 기반을 지켜내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라며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하라.

하나,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단호히 배제하라.

하나, 농축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최우선 고려한 협상 전략을 수립하라.

2025년 7월 25일

창 원 시 의 회

공원일몰제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문

창원시는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이미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 공원부지 보상 관련 지방채만으로도 1,590억 원에 이르며 이에 따른 이자액만 160억 원이다. 앞으로 미집행 공원면적 중 사유지만 하더라도 93만㎡에 1,100여억 원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지방채 원금도 1,200여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이는 창원시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로, 지방정부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수준이다.

이는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시는 토지보상 예산이 당초 목표보다 2천억 원 넘게 증가했고, 서울시는 향후 6천억 원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를 앞두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까지 총 7.3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규모의 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가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실효 대상인 공원 중 상당수가 정부가 1970년대 공원 지정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인력·재원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양한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도로, 철도 등 다른 도시계획 시설에는 국비를 지원하면서, 유독 도시공원에만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논리로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 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2018년과 2019년 지방채 이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원금 부담은 여전히 지자체 몫이며,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가 책임지지 못하는 공원은 해제하라고만 한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민간특례사업 등 불가피한 방법을 모색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투명성 논란과 각종 부작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의 해결 방안으로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 그리고 법령상 더 이상 실효 유예 연장이 불가능한 2027년 6월이라는 최후의 시한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나서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다.

100만 창원 시민에게 도시공원은 여가, 문화, 휴식 공간으로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까지 아우르는 무한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지닌 공공재이다. 이러한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하여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공원 토지매입비를 직접 지원하라!

하나. 2023년까지 발행된 지방채의 이자액을 5년 동안 70% 국비 지원하는 것을 모든 지방채에 대하여 상환 완료 시까지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적극적 해결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남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창원 시민은 물론 전국의 시민들이 소중한 녹색 공간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공원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2025년 9월 1일

창 원 시 의 회

농어촌 숙련인력 감소 및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최근 우리나라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집중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각한 인력 부족과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농어업의 지속성과 직결되는 숙련된 전문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경남지역에서만 1년 사이 약 4만 명의 숙련된 농어업 인력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지역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산업 균형 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여기에 더해,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폭우, 이상기후 등은 농어업 현장의 불확실성과 피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잦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수확과 어업 활동이 불안정해지고, 이는 숙련인력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농어촌 위기 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농어촌에 정착한 숙련인력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정주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숙련농어업인력 감소에 대한 정밀 조사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유입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착지원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라.

2025년 9월 1일

창 원 시 의 회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센터 설치 촉구 건의문

최근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생활지도 중인 50대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가 점심시간에 1학년 교실에 들어온 남학생에게 이유를 묻자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불가능한 교육 현장을 다시 한 번 목격했다.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이후이다.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보충 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이 핵심이었는데 현실적으로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이 조장되고 있다.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되다보니 교사와 학생 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학교의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물론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학부모의 갑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부족으로 학교 폭력도 늘고 있는데 교육부의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였지만 교사들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공동성명을 통해 교권 보호 5법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광역 교육청뿐 아니라 모든 교육지원청에 센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 보호의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며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에 교권 보호센터를 설치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긴급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환경과 학교 특성을 잘 알고 있어 지역별 교권 침해 유형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장기적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일부 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상담과 법률 지원을 외부 위탁에 의존하거나 법률 검토에만 수 주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교권보호센터에 교육활동 보호 담당 장학관·장학사, 파견교사, 법률 전문가 등의 인원 확충 및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 교육, 갈등·조정 회복 프로그램 등의 도입과 국가 차원의 표준 지침 마련,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격차 해소 등도 필요하다.

이에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회복을 통한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요청한다.

하나, 지역별 특성에 맞고 실효성 있는 교원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직무별 인원 충원과 상시 배치를 통해 내실있는 교권보호센터 운영을 담보하라!

하나, 교권보호센터의 각종 교육, 상담, 긴급 지원 프로그램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국가 차원의 표준 지침 마련과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라!

2025년 9월 12일

창 원 시 의 회

낙동강 하류지역 창원시 수돗물 원수 요금 감면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의 물 관리 정책에는 근본적 모순이 존재한다. 낙동강 수계를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창원시는 심각한 수질 악화로 고비용의 정수처리를 거쳐야 함에도, 전국 단일요금제로 1급수 지역과 동일한 원수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여기에 수질개선 부담금과 추가 정수처리 비용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구조적 불합리가 지속되고 있다.

낙동강의 현실은 냉혹하다. 각고의 노력 끝에 3~4급수에서 겨우 2급수까지 끌어올렸음에도, 2024년에만 총 167일, 1년의 45.7%라는 긴 기간 동안 조류경보가 발령되었다. 반면 수도권 지자체들은 애초부터 한강 1급수라는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겨우 2급수에 머물며 하루건너 한 번꼴로 조류경보에 시달리는 지역과 1급수인 지역이 같은 값을 치르고 있어, 수질은 나쁜데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온다. 이런 구조적 불평등은 반드시 해소되어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재정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원수 구입으로 83억 원을 지출하는데, 수질 개선 명목의 물이용부담금 151억 원을 징수당하고 정수처리 비용 24억 2천만 원을 추가 부담한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은 8억 9천만 원에 불과하다. 더욱 불합리한 것은 같은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광역시가 수질연동요금특례로 물이용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이 특례는 BOD(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3mg/L 초과 시 부과율을 70~50%까지 감면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같은 수질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변화의 근거는 이미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에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생긴 셈이다. 수질이 천양지차인 원수에 획일적 요금을 적용하는 현행 구조야말로 이 논리에 따라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부 및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원수 수질 기반 차등요금제를 즉시 도입하라.

조류경보 발령 일수와 BOD, TOC(총유기탄소) 등 객관적 수질지표에 연동한 원수 요금 차등 부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2024년 기준 연간 167일의 조류경보가 발령되는 수역과 1급수 청정 지역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둘째, 물이용부담금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라.

현행 지원 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조류경보 단계별 차등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151억 원의 부담금을 징수하면서도 8억 9천만 원에 불과한 지원금으로는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담금 대비 지원금 비율의 현실적 조정이 시급하다.

셋째, 창원시에 부산시와 동등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특례를 적용하라.

같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수질 피해가 유사함에도 지자체별로 차별적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의 기본이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물 복지 실현 의무를 지지만, 그 토대가 되는 공정한 물 관리 구조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낙동강 수계 지자체들이 감내하고 있는 과도한 '물값' 부담은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근본 문제다. 수질에 기반한 원수 요금 조정과 물이용부담금 차등 지원 제도화를 조속히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9월 12일

창 원 시 의 회

국립남부청소년 수련원의 창원시 건립 촉구 건의문

창원특례시는 경남의 수부도시이자 동남권 핵심 거점 도시로, 경남 전체 청소년 인구의 31%가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창원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전무하며, 청소년수련시설 9개소가 운영 중이나 대부분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로 안전과 편의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들의 이용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에서 제시한 핵심과제인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추진하기에도 역부족이다.

□ 전국 1~4위 청소년(9~24세) 인구현황(‘25.7월, 주민등록인구통계)

(단위:명)

| 경기도(1위) | | 서울(2위) | | 경남(3위) | | 부산(4위) | |
|------------|-----------|-----------|-----------|-----------|---------|-----------|---------|
| 총인구 | 청소년인구 | 총인구 | 청소년인구 | 총인구 | 청소년인구 | 총인구 | 청소년인구 |
| 13,715,016 | 2,139,156 | 9,323,492 | 1,297,527 | 3,214,016 | 478,737 | 3,251,625 | 445,527 |

※ 창원인구/ 청소년인구(‘25.7월) : 994,283명/148,524명, 경남전체 청소년인구의 31%임.

청소년기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진로 탐색이 필수적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뿐 아니라 비행 예방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핵심 인프라다. 따라서 창원에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 확충을 넘어, 청소년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책무라 할 수 있다.

특히 창원에는 로봇·우주항공·방산·에너지·스마트제조 등 첨단 산업이 집적된 도시로, 수련원을 이러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미래직업체험형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경남 전역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도시와 자연이 밀접하게 공존하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청소년들에게 첨단 산업 체험과 더불어 자연친화적 활동까지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은 연수, 청소년캠프, 전국 규모 행사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타 지역 청소년과 학부모 방문이 늘어나면서 창원특례시의 브랜드 가치 또한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는 단순한 청소년 시설 건립을 넘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연번 | 지 역 | 시설명 | 생 활 관 수용인원 | 주 요 내 용 | 준공월 |
|----|--------------------|-----------------------|---------------|--|---------|
| 1 | 부산시 (사하) | 국립을숙도청소년 생태안전체험수련원 | 162명 | • 낙동강과 하구언, 을숙도 갯벌 등을 활용한 습지관찰, 탐조 활동 등 | '23.06. |
| 2 | 전북도 (김제) |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 | 388명 | • 생명과학, 농업기술, 생태환경, 농업문화, 융합진로 체험활동 운영 | '13.04. |
| 3 | 전남도 (고흥) |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 214명 | • 우주인 훈련체험 활동관, 로켓 발사장, 천체투영관 등 운영 | '01.07. |
| 4 | 경북도 (영덕, 봉화) | 국립청소년 해양센터 | 292명 | • 극지실험실, 선박항해 시뮬레이션, 수중로봇 체험장비 등 운영 | '13.07. |
| 5 | | 국립청소년 미래환경센터 | 162명 |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육상 생태보존 프로그램 운영 등 | '22.07. |

현재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부산, 전남, 전북, 경북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청소년 인구가 전국 3위인 경남에는 단 한 곳도 없다. 따라서 청소년 인구의 31%가 몰려 있는 창원특례시에 국립남부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은 지역적 형평성과 정책적 필요성 모두를 충족하는 필수 과제이다.

이에,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창원시의회는 청소년들의 미래직업에 대한 체험과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시민 여가공간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을 경남 전체 청소년 인구의 31%를 차지하는 창원특례시에 건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5년 9월 12일
창 원 시 의 회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창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창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창원시민의 33년이 넘는 간절한 염원이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국회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의과대학 미설치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밝힌 의대 신설 대상 지역은 인천, 전북, 전남, 경북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경남 지역은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보건의료 향상이라는 국정철학에 반하는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는 경남 최대 도시이자, 경남 전체 인구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추 도시임에도, 비수도권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도시로 남아 있으며, 의료인력 자립 기반과 공공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연간 23만 명에 달하는 창원시민들은 매일 수도권과 타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진료비 외에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막대한 직·간접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추가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역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자 지역경제의 손실이며 시민 복지의 심각한 후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려내겠다”고 공약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균형 잡힌 정책 실천 없이 단순 구호에만 머무른다면 창원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의 오랜 염원을 다시 한 번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창원시에 의과대학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창원시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하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

2025년 9월 12일

창 원 시 의 회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및 특례시 권한 확대 촉구 건의문

정부와 국회는 대도시의 복합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자치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중간 단계 자치형태의 특례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창원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특례시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수원·용인·고양·화성과 함께 전국 5개 특례시 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창원을 제외한 4개 도시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제도 운영의 균형성과 다양성,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지역 대표성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실질적 자치역량과 복합행정 수요를 갖춘 도시라면 특례시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중심의 인구 기준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는 다수의 비수도권 중추 도시들의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고, 비수도권 특례시는 특례시 지정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특례시 권한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서라도 비수도권 특례시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특례 권한이 제도화되고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현실에 기반한 행정 실험과 정책 축적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도권 중심의 도시만으로는 권한 이양의 보편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비수도권 대표 특례시가 존재해야만 제도 전체의 외연이 확대되고, 중앙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정부와 함께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용인·고양·화성특례시의회에도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인구 기준 외에도 하향화와 함께 행정 수요, 광역기능 수행 여부, 도청 소재 여부, 산업 기반, 생활권 중심성 등을 반영한 복합지표 기반의 특례시 지정 및 유지 체계를 마련하고, 권역별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특례시 지정 및 유지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관계 부처와 특례시 간의 정례 협의체계를 제도화하라. 또한, 조직권·재정권·도시계획 결정권·자치입법권 등 광역시급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고, 권한 이양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이행하라.

하나. 5개 특례시의회는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특례시 지정 및 유지 필요성에 대해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비수도권 특례시 존재가 특례 권한 확보와 제도 완성의 발판임을 함께 인식하며 연대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2025년 9월 12일

창 원 시 의 회

여성농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의 농어촌 여성들은 실질적으로 농어업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경영주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여성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어촌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경영주 등록을 주 경작자에게만 인정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을 대부분 배우자 자격의 공동경영주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농어업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겸업에 나설 경우 공동경영주 지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불금 등 각종 정책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농어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24년 농가경제조사 및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농업 소득은 농가소득의 19%에 불과하며, 어업소득 역시 전체 어가소득의 4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농외소득은 40%, 어업외 소득은 2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어업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재해와 계절적 휴업까지 겹쳐 대부분의 농어업인이 겸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도는 남성 경영주가 겸업을 하더라도 경영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동 경영주인 여성농어업인은 겸업이나 일용직 종사,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등의 사유만으로 지위를 잃게 만든다. 이는 명백한 제도적 불평등이며 여성농어업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차별이다.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경영에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육아·지역사회 활동까지 떠맡아 다중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공동경영주의 법적 지위를 불분명하게 두어 여성농어업인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은 반드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공동경영주는 당연히 경영주와 동등한 지위와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업 발전의 동반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농·어업경영체 등록 제도에서 공동경영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주와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공동경영주가 생계를 위해 겸업을 하더라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업 소득의 불안정성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등록 요건을 완화하라.

하나. 공동경영주 등록 요건에서 모든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농어업 경영 참여도를 기준으로 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라.

2025년 9월 12일

창 원 시 의 회

진해신항 항계선 경남 관할 확보를 위한 촉구 결의문

경상남도과 창원시는 국가 물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그동안 항만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2027년 개항 예정인 진해신항은 대한민국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 도약할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진해신항 항계선 조정 과정에서 부산 관할로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현실이 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조정을 넘어 경남 항만산업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역경제 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 될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진해신항 항계선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며, 경남 항만의 독립성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진해신항 항계선을 반드시 경남 관할로 재확정하여 부산 관할 편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라.

하나. 진해신항은 마산항·진해항과 연계된 경남 항만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산항의 보조 항만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독립적 위상을 보장하라.

하나. 경남 항만산업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는 책임 있는 항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라.

2025년 9월 12일

창 원 시 의 회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역할 강화 촉구 건의문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국비 17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60억원, 민간 780억원 총 1,050억원 규모의 국가 공모사업이다. 민간 780억원 중 710억원은 PF방식으로 대주단에서 조달하였으나 준공 지연, 수요처 미확보 등으로 PF 대출이자 납부 지연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대주단에서 디폴트가 선언되었다. 결국 운영 주체인 (주)하이창원이 대주단 관리 체제로 넘어가며 사업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정적인 수요처 부재이다. 해당 플랜트는 하루 5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나 저장용량은 15톤에 불과하여 최대 3일치 생산분만 보관 가능하여 사실상 장기 저장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고정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하루 8,400만 원 연간 최대 약 300억 원에 달하는 액화수소 구매대금을 대주단에 지급해야 하지만, 이는 창원산업진흥원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창원시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대주단은 가압류 조치를 실행에 옮길 경우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불가능한 수준의 재정 압박”으로 귀착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과 창원시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첫째, 국비 교부 이후 후속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본 사업은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모 선정 이후 사업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거나 성과를 관리하는 제도가 사실상 부재하다. 그러므로 사업 공모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 마련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소 수요처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수소는 초기 인프라 단계에서 정부가 직접 수요를 창출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민간 시장에서 자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발전사, 운송 분야, 수소 전문 기업 등과 연계하여 정부 차원에서 수요처를 매칭하거나 의무사용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수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민간 대기업의 참여와 매각 방안이 제도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현재 SK, 효성 등 주요 대기업들이 액화수소 관련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만큼,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또한 독자적 운영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대기업 지분 참여나 매각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공모사업 관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수소 산업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전략 산업이지만, 현재와 같이 국가 공모사업 후 지원 체계가 요원한 방식으로는 수소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앞선 네 가지 방안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국가 수소 산업 전반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9월 12일

창 원 시 의 회

홈플러스 폐점·매각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우려 및 대응 촉구 결의문

지난 9월 3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는 올해 안에 전국 15개 홈플러스 매장을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다수의 점포에 대한 임대계약 해지 통보에 이어, 추가적인 대규모 매각 및 폐점 가능성이 가시화 된 것이다.

홈플러스는 단순한 대형마트가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 입점 소상공인, 납품업체, 지역 농축수산업 생산자들의 생계를 지탱하는 대형 유통시설이다. 대형 유통시설의 철수는 지역 고용 기반의 붕괴와 상권 공동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이어지며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온다.

창원시 관내에 위치한 홈플러스 3곳은 이번 폐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여전히 지역사회와 종사자들은 불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폐점으로 도심 공동화와 주민 생활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창원시의 경우 최근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폐점으로 지역 상권과 고용 기반 위축을 목격한 바 있다.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로서 지역사회의 고용과 생계를 지탱하는 유통시설을 책임지고 운영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수많은 노동자와 입점 상인, 지역 경제 주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는 기업의 책임을 외면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MBK 파트너스는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기업 회생 노력에 나서야한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폐점과 그로 인한 지역 상권의 붕괴, 고용위기는 결코 특정 기업의 문제에 국한될 수 없으며, MBK 파트너스는 물론 정부와 국회 모두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역경제의 지속성과 시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MBK 파트너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자구노력을 통해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이행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입점 상인·종사자·납품업체 등의 피해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고용 안정 및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대형 유통시설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입점 상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5년 9월 12일

창 원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해련)는 의회사무국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8월19일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해련)는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 일정을 9.1.~9.12.(12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해련)는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을 예비심사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선애)는 소관부서의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및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9월 1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봉곡민속체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등 2개소를 방문하여 사업계획과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선애)는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청취했으며 △「창원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소관부서의「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복지위원회는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을 예비심사했으며 소관부서의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7월 23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는 대상공원 내 '맘스프리존'을 시작으로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소리단길 코워킹 스페이스를 방문해 육아·창업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내실 있는 시설 운영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을 예비 심사하고 2025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6건을 보고받았으며,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순욱)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순욱)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전홍표)는 「창원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소관부서의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7월 22일

제145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전홍표)는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 현장, 자족형복합행정타운, 구항뽕프장, 광암해수욕장을 현장방문하여,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전홍표)는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보고 등 2건의 보고를 받았다. 또한,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현)는 9월 11일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제예산안"을 종합심사했다.



구 점 득 의원 (팔릉동, 의창동)

- 1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2 관광정책개발연구회 현장 최종보고회
- 3 25.11.27 문화환경도시위원회
- 4 창원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 포럼
- 5 한국전자기술원 방문





권 성 현 의원 (동읍, 대산면, 북면)

- 1 제1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2 북면 기초질서 봉사활동 참석
- 3 25.11.20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분과회의
- 4 의료바이오·수소에너지 신성장 산업 점검
- 5 수출용 단감 선별장 현장 방문





김 남 수 의원 (봉림동, 명곡동)

- 1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 창원한들초등학교 행복나눔 한마당
- 3 25.11.27 문화환경도시위원회
- 4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 대잔치
- 5 사람동 두레지역아동센터 사랑의 물품 후원 전달식





김묘정 의원 (팔룡동, 의창동)

- 1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 산불재해 현장 봉사활동
- 3 제1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4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원 보고대회
- 5 MBC경남, 남두용의 좋은아침 인터뷰





김 우 진 의원 (동읍,대산면, 북면)

- 1 제147회 제1차 본회의
- 2 삼봉공원 가로등 및 벤치수리 민원 현장 점검
- 3 동읍 자여마을 환경정화 봉사활동
- 4 대산초 등,하곶길 횡단보도 및 육교 현장 점검
- 5 25.10.22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혜란 의원 (팔룡동, 의창동)

- 1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 가로수 꽃잔디 화단조성 봉사활동
- 3 3.23 창원읍민독립만세의거 재현행사
- 4 동진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 5 25.11.10 의회운영위원회





안 상 우 의원 (봉림동, 명곡동)

- 1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2 경남도지사와 함께하는 경남청년 간담회
- 3 봉림동 주민 총회
- 4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인사
- 5 25.9.2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최 은 하 의원 (동읍, 대산면, 북면)

- 1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 북면 천주산 산불 예방활동
- 3 의창구 대산면 벼 병충해 방제 현장
- 4 동읍 어르신 한마당 축제 현장
- 5 25.11.10 의회운영위원회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2025년 학술연구용역 결과 도출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성보빈)는 7월 25일 민생조례 연구용역결과 최종보고회와 함께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여 지난 6월 시민이 제안한 여러 조례 중 시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조례안을 선정하고 제안한 시민 다섯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선정된 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조례안', '공영자전거 이용 촉진 등 조례안' 등 5건이다. 이 날 같이 진행된 연구용역결과 최종보고회에서는 관계 부서가 함께 참석하여 선정된 조례안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소속 의원들은 담당부서에 적극적인 조례 제·개정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연구회는 같은 달 31일 의원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입법역량 강화를 목표로 현행 창원시 조례를 토대로 주의해야 하거나 개선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실제 사례 중심으로 업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미래전략산업연구회(대표의원 오은옥)는 7월 28일 창원시가 미래형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 구조와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지역의 산업 기반과 정책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이날 '미래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수행의 일환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컨퍼런스를 마련했다. 컨퍼런스는 제조업 인프라와 디지털·인공지능 기술 결합 사례,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통한 청년 유입 방안 제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시급성 및 스타트업 디지털 전환 육성·지원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산업 육성 및 인재 유입을 위해 창원시가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을 소개했다.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대표의원 서명일)는 7월 24일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와 교류간담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2021년부터 수행한 연구과제와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올해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방안 연구'의 계획과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여수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연구회는 연구 계획 가운데 플랫폼 마련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 이후 창원천으로 이동해 현장답사를 함께하며 지역주민의 쉼터이자 희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로 회복된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에 대해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향후 두 의회의 활발한 소통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창원특례시도시리브랜딩연구회(대표의원 김영록)는 9월 10일 '창원특례시의 도시 비전 맞춤형 리브랜딩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창원시 리브랜딩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창원시의 브랜드가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정체성이 분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민참여형 리브랜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스포츠 분야와의 협업과 생애주기 관점을 접목해 시민의 생활 전반에 스며드는 도시 브랜드를 구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회 참석자들은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창원시 리브랜딩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향후 로드맵과 실효성 있는 구체적 대안을 포함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며 파편화된 창원 브랜드를 통합하고 시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브랜드를 만드는데 의견을 모으며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했다.



관광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김혜란)는 9월 30일 돌섬 안점 점검 및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마산권 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확인 및 연구 용역 결과 보고를 위해 마산 돌섬에서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창원권·마산권·진해권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여 웅천도요지 관광 콘텐츠 개발, 북면 온천 스포츠 연계 방안 등 숨은 관광자원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조사·논의를 진행해 왔다. 의원들은 이날 보고회에서 타 지역 사례를 토대로 권역별 관광지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며 단기적으로 기존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고 실효성 있는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며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했다.



도시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경수)는 9월 29일 '창원시 뉴빌리지형 단독주택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지난 4월 착수보고회 이후 일곱 차례의 시민 인터뷰를 통해 단독주택지 개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관련 국내외 사례를 조사했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단독주택지 기반 시설이 낙후돼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도로·주차 등 인프라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보고회에는 인터뷰에 응했던 창원 시민 5명이 직접 참석해 단독주택 주거 환경의 불편함을 공유했다. 또 창원시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주택정책과, 건축경관과 관계자가 참석해 경청했다. 연구회는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독주택지의 주거환경 개선 방안 마련에 공감하며 보고회를 종료했다.

사진으로 보는 의회 뉴스



● 2025. 7. 1. 제15회 창원시민의날 기념식



● 2025. 7. 7. 구내식당 개소식



● 2025. 7. 9. 경사형 승강기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 토론회

● 2025. 7. 9. 창원시정연구원 개원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2025. 7. 12. 한청 청소년문화 페스티벌



● 2025. 7. 16.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 (65)



● 2025-07-16 팔용로 교통안전시설물 횡단보도 운영 개통식



● 2025. 7. 17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25. 7. 24.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의장협의회
(수원시)



● 2025. 7. 24.
제13회 창원시 사회복지사 대회



● 2025. 7. 24.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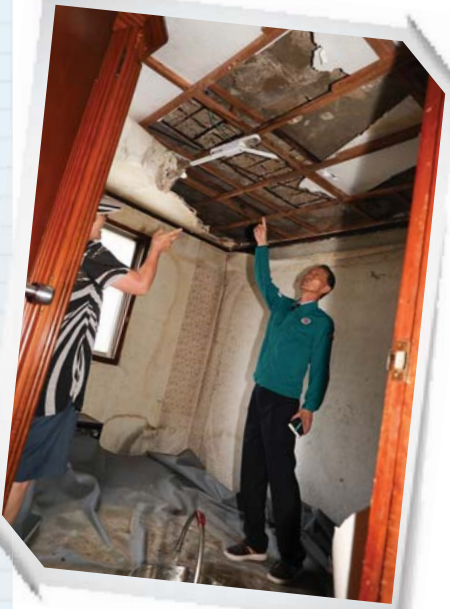
● 2025. 7. 25. 경남 수해지역 성금기탁식



● 2025. 7. 25. 창원시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 2025. 7. 25. 창원시의원 및 직원을 위한 맞춤형 법제교육



● 2025. 8. 7.
봉암연립주택 현장 방문



● 2025. 8. 10. 제12회 창원특례시장기 궁도대회



● 2025. 8. 10. 의장단 간담회



● 2025. 8. 10. 의장단 을지연습장 격려 방문



● 2025. 9. 3.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 2025. 9. 3. 제29회 노인의날 기념식 및 경남실버체육대회



● 2025. 9. 3. 생활정치 일수한마당



● 2025. 9. 7. '제14회 창원특례시장기 배드민턴대회' 개최식



● 2025. 9. 12. 오동동 아맥축제



● 2025. 9. 19. 창원복지 들석들석 talk



● 2025 . 9. 15. 창원향교 추기석전



● 2025 . 9. 29. 추석맞이 복지시설 방문(마산합포구 영신원)



● 2025 . 9. 30.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다짐대회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실천적 전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우진 의원 (동읍, 대산 · 북면)

고령화, 인구 감소, 청년 이탈. 지금의 농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식량 안보, 생태계 보존, 균형 발전이 달린 중대한 과제다. 농촌 활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첫째, 청년의 유입이 핵심이다. 도시의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귀농 지원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스마트팜 교육, 농업 스타트업 육성, 주거 인프라 제공 등 종합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농촌은 단순 노동의 공간이 아니다. 첨단 기술과 결합한 혁신의 무대가 될 수 있다.

둘째,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 농업은 단지 식량 생산만이 아니다. 환경 보전, 문화유산, 생태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유기농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업 확산은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하며, 농촌 체험 관광은 도시민과 농촌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다층적 가치를 정책과 시장에 정당히 반영해야 한다.

셋째, 주민 참여형 지역 개발이 중요하다.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이어야 지속 가능하다. 로컬푸드 운동, 협동조합형 농장, 마을 기업 등은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좋은 사례다. 행정은 이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촉진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넷째, 디지털 인프라 확충도 빼놓을 수 없다. 원격 근무와 비대면 시대에는 농촌도 충분히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터넷 접속조차 어려운 곳이 아직 많다. 광대역망 보급, 디지털 교육, 온라인 판로 개척이 함께 이뤄져야 농촌도 시대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다.

농촌 활성화는 일시적 붐이 아니다. 인구와 자본을 잠시 끌어오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 지속 가능한 생활 공간으로서의 농촌을 재설계하고, 그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공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한계를 메우고 가능성을 확장하는 상생의 길, 이제 시작해야 한다.



기초의원의 역할과 책임- 주민을 위한 진정한 대변자가 되어야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현** 의원 (충무 · 여좌 · 태백동)

기초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기초의원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초의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은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초의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에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특히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의원의 또 다른 핵심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다. 특히 주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의원의 중요한 책무다.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초의원의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주민들이

행정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다.

기초의원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복지 정책 제언,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보존하며 발전시키는 일도 기초의원의 중요한 역할이다.

기초의원의 역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정치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복지와 주민을 위한 자리라는 점이다. 기초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명예보다는 오직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화려한 구호나 정치적 수사보다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의원의 역할이다.

결국 기초의원은 주민들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이끌어가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분산형 연료전지 사업, 개선 필요하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의원 (중앙·웅남동)

창원종합운동장 뒤편 산책로를 걷다 보면 나무 울타리로 가려진 시설을 보게 된다. 해당 시설은 창원누리에너지발전소 CN-3 발전소로 올해 운전을 시작했다.

창원시는 ‘수소산업 비전 2040’을 선포하고, 2040년까지 연료전지 발전 자족용량 1200MW를 확보하겠다는 목표 아래 도심 곳곳에서 연료전지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이 ‘창원시 도심분산형 연료전지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 SK에코플랜트 등으로 구성된 창원그린에너지가 시의 유휴부지에 1320억 원을 투자해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부지는 중앙동을 포함한 7곳이며, 이는 수소 기반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앞서 언급한 CN-3는 바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진 발전소다.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에 발맞추어 시작된 이 사업은 고효율, 저소음, 친환경성 등의 장점을 내세우며 추진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시민 소통의 부재라는 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 해당 시설이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는 비단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넘어서,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시민 신뢰의 문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상 발전설비가 3MW를 초과하지 않으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의무는

없지만, 법적 최소기준만을 따르는 방식으로는 공공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더구나 중앙동의 경우에는 불과 100~200m 간격으로 두 개의 발전시설이 마주 보고 있으며, 인근에는 주택가는 물론 곧 입주를 앞둔 대규모 아파트와 개장을 앞둔 대상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대상공원은 향후 많은 시민이 찾게 될 도심 속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처럼 유동 인구가 높은 장소에 어떤 안내 표지 하나 없이 발전시설이 조성된 현실은 심각한 행정 미비를 보여준다.

일부 시민들은 발전기음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 “위험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만큼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수소 기반 설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이다.

수소연료전지는 미래산업이며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공감이나 의견이 배제된 정책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창원시가 시민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는다면,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결국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행정기관 주도의 사업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시는 각 발전소 거점마다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시설의 용도와 안전성,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이 신뢰하고 동참하는 ‘지속 가능한 수소 도시 창원’의 미래도 가능해질 것이다.



인구소멸 대응, 이제는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필요하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의원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고령화 가속화 등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 온 단순한 인구 늘리기 정책, 즉 출산 장려와 전입 유치 중심의 수치 경쟁은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해법이 바로 '생활인구 정책'이다. 생활인구란 단순히 주민 등록상 주소지 인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출퇴근, 통학, 관광, 업무 등 다양한 이유로 이동하거나 체류하며 지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즉 지역과의 다양한 관계 맺음을 기반으로 경제활동, 소비, 사회활동 등 여러 분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폭넓게 포괄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구 통계와는 다른 개념이다.

실제로 생활인구는 교통 요지, 관광지, 혹은 산업 단지 인근 등 일시적 유입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 공식 인구 외에도 많은 사람이 지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은 인구의 양적 확대 보다 질적 전환, 즉 지역에 머무르고 실제로 기여하는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망 개선, 단기 거주 지원, 소상공인 중심 상권 활성화, 창업 공간 제공 등이 생활 인구를 늘리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된다.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위케이션, 은퇴자 마을, 청년 복합공간 조성 등도 필요하다. 일본은 이미 '관계 인구 창출 확대 사업'을 통해 외부인이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마네현의 '시마코토 아카데미'는 외부인이 반복적으로 방문하며 지역에 기여하게 했고, '고향납세 제도'는 도시민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향올래' 사업, 로컬 유학, 농가체험형 숙박 등 다양한 실험적 정책이 시행 중이다. 지역 사례로 경남 창원시의 구산면, 진동, 진전 일대와 같은 해안지역은 세계적 수준의 자연경관과 국도, 도심 접근성을 활용하면 포지타노 같은 해양문화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예술가, 건축가, 상인이 연합한 해양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관광, 휴양, 레저 등 다양한 체류형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 인구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행정기관별로 생활 인구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통계 기준도 일관되지 않아, 정책 평가 및 효과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통계청, 통신사, 교통 카드, 지역화폐 등을 연계해 생활인구를 정량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구 정책의 관점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으로 변화해야 가능한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머무는 실제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얼마나 풍요롭고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이다. 생활인구 중심의 전략이 각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전환이 절실하다.



마산해양신도시, 광장으로 미래를 열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의원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20년 가까이 표류해 왔다. 오랜 지연과 우여곡절 속에서도 시민이 손꼽아 기다려온 것은 다름 아닌 중앙광장이다. 길이 608m, 폭 50m 규모로 계획된 이 광장은 도시의 심장부이자 정체성을 담은 무대다.

그러나 창원시는 최근 이 광장을 '상부 개발과의 부조화 우려'라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했다. 이미 반영된 49억 원의 예산은 정산 처리하고, 특별 회계에서 추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시민 공간을 민간 개발 일정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광장은 건물이 완성된 뒤에 꾸며지는 부속물이 아니다. 오히려 도시의 방향을 먼저 이끄는 공간이다. 서울광장은 1만 3000㎡ 규모지만, 매년 축제와 집회, 문화행사로 '시민의 거실' 역할을 한다. 광화문광장은 3만 4000㎡에 달하며, 국가적 기념식과 대규모 집회의 상징적 무대가 되었다. 마산해양신도시 중앙광장은 약 3만 800㎡ 규모로, 창원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시민의 자부심을 세울 핵심 동력이 될 곳이다.

광장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마산해양신도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이다. 개발 계획에도 '도시 테마와 특성을 반영한 특화 시설'로 명시돼 있는 만큼, 민간 개발 일정에 맞춰 미루는 것은 공공성을 외면하는 처사다. 경제적 효과도 크다. 시민을 모으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주변 상업·문화시설을 활성화한다. 공원이 쉽

다면, 광장은 무대다. 신도시의 활력을 만드는 힘은 광장에서 나온다.

마산은 한때 인구 50만 명을 넘어서며 경남의 대표 도시로 우뚝 섰지만, 지금은 기업과 사람이 떠나 상권이 급격히 쇠락했다. 최근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폐점은 그 침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현실에서 필자는 마산권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한다.

나아가 구산해양관광단지와 해양신도시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간 개발 논리보다 시민 공공성이다. 상업 지역 비율은 오락가락하며 늘리면서 시민이 누릴 공간은 뒤로 미루는 것은 모순이다. 이미 반영된 예산이 있다면 정산이 아닌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광장을 먼저 열어야 시민이 해양신도시를 체감하고, 전체 사업도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광장이 살아야 해양신도시가 산다. 광장이 활성화 되어야 해양신도시가 살아나고, 옛 마산 산업화와 예술인의 요람이던 7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창원 마산합포구 원도심도 변화와 발전의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해양신도시 내 중앙광장은 하루빨리 개장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창원특례시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을 필자는 호소한다.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정착, 창원시와 함께

기획행정위원회 **김이근** 의원 (구산·진동·진북·진전면, 현동, 가포동)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는 새로운 대안으로 외국인 주민의 유입과 정착 지원이 주목받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국제적 산업도시로, 수년간 외국인 주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지역사회 융합과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자체 중에서는 이미 충북 제천시, 광주광역시, 안산시 등에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창원 특례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다양한 그룹이 지역 내 산업과 학교, 그리고 우리 생활 공동체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고려인과 재외동포 주민들은 단순 노동력 공급자를 넘어 지역경제, 문화, 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창원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중요한 주체라 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은 인구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 실현 국제 교류 증진·사회 통합 등 대도시인 창원특례시의 경쟁력 제고와도 직결된다.

차세대 이주민의 정체성 함양과 미래 세대 육성 역시 지역 포용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토대가 된다. 이에 창원특례시도 관련 조례 제정과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창원특례시는 외국인주민팀을 신설하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여러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고려인 주민 및 기타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어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태조사와 통계 구축, 지원사업의 유형별 분류 및 예산 편성 근거 마련, 행정 서비스 매뉴얼화와 담당 부서의 책임 강화, 지역 주민과 이해 관계자 간 소통 확대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수적이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한국어 교육·취업 연계·의료비 지원·법률 상담 등 복합적 정책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창원특례시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편적 인권 신장 등 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재외동포 정착 지원이 정부의 주요 과제를 감안할 때, 창원시는 조속히 종합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제 창원특례시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창원의 도시 브랜드와 인구 정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 사회 실현의 주인공이 되어주길 제안한다.

2026 회기 운영일정(안)

| 월별 | 회기별 | 회 기 | | 주요 처리 안건 |
|----------------------------|-------|---------------------|----|---|
| 계 | | 8회 110일 | | (정례회 50일, 임시회 60일) |
| 임 시 회 | 제149회 | 1.20.(화)~1.29.(목) | 10 |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 | 제150회 | 3.5.(목)~3.18.(수) | 14 | • 행정사무감사 사전 준비(시기, 계획)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시정 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 | 제151회 | 4.21.(화)~4.30.(목) | 10 |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 | 제152회 | 7.1.(수)~7.2.(목) | 2 | • 의장단 선거(7.1.) • 상임위원회 구성(7.2.) |
| | 제153회 | 7.16.(목)~7.27.(일) | 12 | •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 제 1 차 정 례 회 | 제154회 | 9.1.(화)~9.23.(수) | 23 | • 행정사무감사 • 202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승인 • 시정 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 임 시 회 | 제155회 | 10.19.(월)~10.30.(금) | 12 |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 제 2 차 정 례 회 | 제156회 | 11.25.(수)~12.21.(월) | 27 | •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 2027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시정 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 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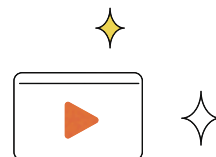


창원특례시의회는

시민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활짝 열려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입니다.



방청안내

방청안내

일반신청(개인)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방청절차

① 방청신청 → ② 방청허가 → ③ 방청권 교부 → ④ 방청

문의

의회사무국 : 055)225-5311



창원특례시의회

<https://council.changwon.go.kr>

지금 이 순간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의회 이야기를
의회소식지에서 만나보세요.

